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2013-109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3년 4월 9일자 6면 「흔들림없는 김무성」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8일 4·24 부산 영도 재선거에서 김비오 후보 지원을 위해 총출동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리자고 압박해도 김무성 후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새 정부 성공을 돕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정면 돌파했다. 여당 원내 대표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후보는 이날 기자의 동행 취재에도 “국회에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갈 것”이라며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김무성 후보는 이날 오전 영도구 내 한 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 나섰다. 환갑을 넘었지만 그는 특유의 친근함을 앞세워 “어르신들 박근혜 대통령 많이 찍어주셨죠. 그래서 대통령 됐습니다”라며 다가섰다. 그는 이어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뒷받침을 못해줘 고생이 많으시다. 제가 들어가 박 대통령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영도구청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린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지만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것이다. 김무성 후보는 기사가 “민주당이 중

양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중앙당 지원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중앙 무대의 정쟁을 지역에 옮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무성 후보는 이어 태종대의 태종사를 방문해 도성 스님을 접견하고 “큰 일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작은 일에 분노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큰 스님 말씀에 “원내대표 시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랑 큰 일을 많이 처리했다”며 “국회에 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한 측근은 “지역 현안보다 ‘큰 일 하라’는 덕담이 많다”고 전하며 “원내대표보다 큰 일을 하려면 당대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차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무성 후보는 차량 이동 중 노사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해 혼역을 치른 한진중공업을 지나면서 “노사 문제에 정치권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생태계에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은 못된 짓”이라며 “한진중에 나쁜 선례를 남겨 쌍용차 문제도 커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폐업 방침에 논란이 거센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귀족 노조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면 홍준표 지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 아니냐”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노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선을 앞두고 기자가 부산 영도 선거운동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의 하루 일정을 동행 취재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기사는 김 후보의 행적을 스케치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게 경종을 울리자고 압박해도 김무성 후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새정부 성공을 돕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정면 돌파했다』 『국회에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갈 것이라며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특유의 친근함을 앞세워 …』 『…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것이다』 『“지역 현안보

다 큰일 하라는 덕담이 많다”』『“... 당대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차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등의 기술을 하고 있다.

제목도 이같은 기사 본문을 반영해 「흔들림 없는 김무성/야 지도부 부산 총 출동에도 “국회서朴정부 돕겠다” 기염」으로 표현했다.

객관적인 신문 보도 기사라기보다는 김무성 후보 진영이 제작하는 선거운동 소식지 내용을 연상케 한다.

기사와 제목이 김무성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과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경제는 영도구의 여러 후보자 가운데 김무성 후보 외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지면 할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4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문〉

每日新聞 2013년 5월 10일자 1면 「PK관 되어가는 새누리」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의 권력 구도가 부산경남(PK)으로 남진하고 있다.

‘박근혜가 빠진 대구경북’과 ‘김무성이 복귀한 부산경남’의 대조적인 위상이 박근혜정부 초기 집권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남의 위상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승승장구 일색이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주요 내각의 수장을 거머쥐었다. 새누리당 내부 역학지도도 부산경남이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돌아온 ‘좌장’ 김무성 의원의 힘이 크다. 김 의원은 당장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일부에선 차기 대선주자에도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형편이다.

한 여론 인사는 “지난 대선의 ‘1등 공신’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내년 중순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등 부산경남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면서 “내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주영 의원이 첫 신표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침통한 분위기다.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물론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과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주요 당직자들이 내주초 ‘당직’을 벗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당장 당 중진 및 최고위원회회에 지역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지난 총선에서 박종근·이해봉·이상득 등 굵직굵직한 의원들이 줄줄이 낙천·낙선 하는 등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든 측면이 많다”면서 “대구경북 27곳 지역구 중에 11명이 초선들로 채워지는 등 꼬맹이들만 있는 ‘불임 TK’로까지 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 다른 관계자는 “지역은 포스트 박근혜를 키우지 않은 죄값을 톡톡히 치루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산경남이 치고 나가고, 대구경북의 현안들을 대변해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할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정치 지형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최경환 의원이 당선된다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산경남 출신인 이주형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 당내 권력축은

부산경남으로 기울게 된다.

당내 분위기를 볼때 3선의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

최 의원 측은 10일 “우리가 6.5대 3.5로 앞선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이 의원 측은 “6대 4 정도로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맞받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집권 초기인 만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인사가 원내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최 의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무성 의원이 중심 축인 부산경남에 맞서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 지분의 세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권력구도 추이를 분석한 기사다. 기사는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부산경남(PK)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반해 대구경북(PK)은 위기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TK출신 최경환 의원의 당락에 따라 TK정치권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최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

기사는 우선 새누리당 권력구도에서 ‘박근혜가 빠진 대구경북’과 ‘김무성이 복귀한 부산경남’을 내세워 ‘대구경북의 위기감’과 ‘부산경남의 승승장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흥미로울 순 있으나 사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기사는 『“(내년초)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내년 중순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년 후에 있을 불확실한 미래를 예단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이 기사의 키워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TK출신 최경환 의원이다. 기사는 최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PK출신의 이주영 의원을 경계하고 있

다. 기사는 『“내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의 약진에) 이주영 의원이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경환 의원이 당선된다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산경남 출신인 이주형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 당내 권력 축은 부산경남으로 기울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당내 분위기로 볼 때 3선의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위 기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최경환 의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每日新聞은 위 기사의 바로 위인 1면 사이드 기사에 사진과 함께 최경환 의원의 기자간담회 기사를 다뤘다. 이러한 지면 배치와 기사 내용으로 위 기사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는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편집자는 예단을 전제로 작성된 위 기사의 큰 제목으로 인용부호도 없이 「PK판 되어가는 새누리」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러한 보도자세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문〉

경북일보 2013년 9월 12일자 1면 「김순건 10.8%-박명재 43.3%」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임영숙 현 비례대표 포항시의원 개인이 새누리당 공천신청을 앞두고 지난 7~8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명재 예비후보와 당내 예비후보들간 지지율 격차가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숙 시의원이 밝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이번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다음 예비후보들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박명재(43.3%), 김순견(10.8%), 임영숙(9.1%), 서장은(7.5%) 순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2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일 보도된 본지(1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분포로 박명재 예비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별 특성은 박명재 예비후보라는 응답은 동해·호미·구룡포·오천·장기 거주자(52.9%)·남성(46.2%)·50대 및 60대 이상(50.6%)·농림어업 종사자(60.1%) 등에서, 김순견 예비후보라는 응답은 울릉군 거주자(14.4%)·여성(10.9%)·50대(13.3%) 및 40대(13.1%)·농림어업종사자(13.0%)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는 대이·효곡·연일·대송 거주자(12.7%)·여성(9.3%)·20대(14.9%)·노동직 종사자(14.0%) 등에서, 서장은 예비후보는 대이·효곡·연일·대송 거주자(7.9%)·여성(8.7%)·20대(18.0%)·학생(20.0%) 등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외에 국회의원 재선거 여성후보 공천 찬반여부 질문에는 찬성 35.4%, 반대 34.9%, 잘모름 29.6% 등으로 오차범위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가 9.1% 지지를 얻어 김순견 예비후보와 불과 1.7%차이며, 서장은 예비후보 보다는 1.6% 앞섰다.

이는 그동안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여성후보로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가구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2만2천865세대 통화시도)으로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거주 19세 이상 남(513명)·여(487명) 1천명을 최종 표본으로 실시했다.

연령별로는 20대 171명, 30대 185명, 40대 213명, 50대 224명, 60대 이상 207명으로 인구 비례 무작위 추출했다.

통계보정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3.1\%$ 이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32186&news_area=010&news_divide=&news_local=10,17&effect=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9월 7, 8일 이틀간 실시된 이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박명재 43.3%, 김순견 10.8%, 임영숙 9.1%, 서장은 7.5%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이 29.3%였다.

편집자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큰 제목을 「김순견 10.8%-박명재 43.3%」로 뽑았다.

위 여론조사는 경북일보가 실시한 것이 아니다. 입후보 예정자인 임영숙 씨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얻은 결과인데 경북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한 것이다.

포항시의원인 임씨는 이번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경북일보 같은 날자 3면 보도)한 예비후보로 여론조사 대상 후보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임씨가 출마를 위한 선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사시점, 조사대상, 설문내용, 문항의 수, 조사방법 등이 의뢰자의 요구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인 임씨는 유권자에게 여성후보 공천여부에 대한 질문을 조사항목에 넣었다. 그런데 기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재선거 여성후보 공

천 찬반여부 질문에는 찬성 35.4%, 반대 34.9%, 잘모름 29.6% 등으로 오차범위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그 결과를 다뤘다. 결과적으로 임씨가 자연스레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것이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 「임, 女후보 경쟁력 부족 우려 상당부분 해소한 듯」이라고 뽑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예비후보’ 선정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남·울릉 재선거’ 예비후보는 1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기사에서 언급된 예비후보는 단지 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뤄 모든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특정 예비후보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도, 기사는 ‘임씨의 여론조사’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예비 후보들 중 단 4명만 기사에서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경북일보가 이번 선거의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예비후보가 자신의 입맛에 맞춘 설문내용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1면 머리기사로 다룬 것은 선거기사의 기본원칙인 공정성·형평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9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 문〉

중부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11면 「표명구가 만난 김의범 청년회의소(JC) 중앙회 부회장/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위하여 … 청년창업을 돕는 기관 만들겠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중부일보는 광고 없이 1개 면 전체를 할애한 ‘Issue & 사람’ 면을 통해 김의범 청년회의소(JC) 중앙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김 부회장에 대해 대서특필하면서 인터뷰를 한 계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첫 리드 문장에서 김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현안”』이라고 전제한 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사)청년창업원 설립을 준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도 주 제목을 「김의범 청년회의소(JC)중앙회 부회장/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위하여 … 청년창업을 돕는 기관 만들겠다」고 뽑았다. 이 점에 미뤄 김 부회장의 ‘청년창업원 설립’ 준비에 주목해 인터뷰가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청년회의소는 민간단체다. 청년창업원은 그 단체의 부회장의 구상이고, 현재로선 설립 준비단계일 뿐이다. 대형 인터뷰 사진을 게재하며, 1개 면을 할애할 정도로 큰 뉴스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김 부회장은 내년 지방선거 안성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다. 중부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7월 보도한 바 있다. 또 인터뷰 기사에서 소개했듯이 현재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고,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다.

따라서 뉴스거리가 있는 뚜렷한 계기도 없이 특정 정치인을 장점 일변도의 내용의 인터뷰 형태로 크게 다룬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www.joong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674>

▲ 2013-1296 신문윤리강령 위반
新亞日報 발행인 김 명 수

〈주문〉

新亞日報 2013년 11월 12일자 24면 「인터뷰/오인영 서울시 영등포구의회의장 “모두 다함께 잘사는 영등포 만들기 매진”」, 11월 15일자 24면 「인터뷰/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역사 문화 관광 중심도시 강북 만들기 총력”」, 11월 18일자 24면 「〈기획특집〉 앞서가는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新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월 12일자 24면 인터뷰/오인영 서울시 영등포구의회의장〉



〈11월 15일자 24면 인터뷰/박경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11월 18일자 24면 인천광역시 기획특집〉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新亞日報는 뚜렷한 계기나 이유가 없이 1개면씩 할애해 정치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싣거나 특정 자치단체를 소개하는 기획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오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장 인터뷰 기사에선 오 의장이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관련 상을 수

상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인터뷰 기사에선 강북구청의 일자리 행정, 등산교실, 장학재단 설립 운영 등에 대한 홍보사진을 보도했다.

기획특집기사로 다룬 인천광역시에 대한 기사에선 송영길 시장의 시정활동을 담은 각종 사진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서 게재된 사진은 해당 정치인 혹은 자치단체가 제공한 것으로 기사의 성격과 맞지 않아 해당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들은 해당 정치인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0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중부일보 2013년 11월 29일자 1면 「염태영, '수원 지하철 시대' 열었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수원구간 완전 개통으로 본격적인 수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이번 개통 구간은 수원 망포역~매탄권선역~수원시청역~매교역~수원역 총 5.2km로 지하철 1호선과도 연결된다.

여기에 2016년 개통될 수인선까지 연결되면 인천~수원~성남을 잇는 수도

권 남부를 동서축으로 이어주는 순환철도망으로 거듭나게 된다.

2002년 오리역~죽전역 구간에서 첫 삽을 떴던 분당선 연장구간은 모두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11년만에 완공하게 됐다.

당초보다 한 달 먼저 개통된 분당선 연장구간을 통해 수원에서 40여분이면 강남까지, 1시간대에 왕십리역까지 이동해 서울지역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수원지역에만 수원·매교·수원시청·매탄권선·망포·영통·청명 등 7개역과 기존 국철1호선 세류·수원·화서·성균관대 등 4개역까지 10개역이 늘어났다.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원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수원시 어느 곳에서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은 출퇴근 시간에 6분마다, 평소에는 13분마다 운행하며 평일에는 352차례, 휴일에는 280차례 운행한다.

첫차는 주말·휴일에 용인 죽전역과 서울 왕십리역에서 5시 40분에, 평일에 수원역 오전 5시 3분, 왕십리역 오전 6시 38분, 죽전역 5시 35분에 출발한다. 평일에만 운행되는 급행열차는 6시 49분 첫차가 수원역을 출발, 수원시청역~망포역~기흥역~죽전역 등에만 정차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지하철 시대의 개막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수원연장구간은 29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개통식을 갖고, 30일 오전 5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61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왕십리-수원 복선전철 완전 개통식’을 앞두고, 이 구간 개통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다룬 분석기사다.

그런데 편집자는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오늘 개통식 … 내일부터 본격 운

행」으로 부제목을 달고 「염태영, '수원 지하철 시대' 열었다」라고 주제목을 뽑았다.

제목만 보면 염태영 수원시장의 노력만으로 '수원 지하철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공사는 2002년 시작돼 11년이 걸린 대역사다. 수원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게다가 염 시장은 2010년에야 수원시장에 취임했다.

기사 본문에도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개통과 관련해 염시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1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문〉

全羅日報 2013년 12월 2일자 16면 「“주민을 위한 봉사” 초심, 더욱 크게 펼쳐보고 싶다”/퇴임하는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全羅日報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월2일 퇴임하는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난 28일 만났다. 박 부지사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그는 ‘포용과 소통 공감, 갈등 조정능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포용은 따뜻함, 갈등조정 능력은 리더십, 소통과 감동은 오랜 공직과 두터운 인맥을 통한 경험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이며 그에겐 부단한 실천의 길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부지사는 “(사표)를 던져놓고 보자”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단호한 모습을 비쳐주지 못한 것과 달리 출사표를 던졌다. 고향인 완주 군수와 전주시장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의 속내는 안개 속에 가려진 정치형국에 맞물려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만행 같고 포용력이 강했던 박 부지사는 30여년의 공직생활에 대해 “‘초심’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지켰다”고 밝혔다. 그의 초심은 정책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부친에게 물려받은 주민을 위한 초심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박 부지사의 공직생활과 앞으로 그가 도전해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인 완주군수와 전주시장 중 어디로 출마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출마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어디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후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단체장 출마)가 있었어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었던 마음과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가족들은 평소에도 내가 가는 길을 믿어줬고 지탱해 주었고, 이번에도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 새로운 길을 걷도록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완주와 전주에 대해 뚜렷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고향에 대한 발전과 봉사 등을 여러 차례 말해 전주보다 완주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출마배경도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면사무소직원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동네 각종 민원을 해결하시면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면 자라왔고, 아버님보다 더 큰 곳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직에 들어섰습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아버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셨던 생각을 가지고 나섰죠.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저의 ‘초심’이죠. 아버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인적네트워크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께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더 크게 펼쳐보고 싶습니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조직도 없고 힘든 길입니다.

▲단체장은 순수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은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인적네트워크입니다. 중앙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앙인맥은 지역발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조직은 없고, 아직 인지도에서 밀리지만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알릴 계획입니다. 유권자를 자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자연히 지지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공직생활에서 원칙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먼저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신경 쓰다 보면 주민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고는 주민을 위한 것이지 보고를 위한 보고는 아니라고 봐요. 다음은 원칙에 맞는지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법규와 관련 규정에 맞는 원칙은 주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가입니다. 담당자와 계장, 과장, 국장이 보는 틀은 다릅니다. 공무원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행정은 향후에 닥칠 문제점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 때 다른 면접관과 다른 질문으로 유명했다면서요.

▲지금은 모든 공무원들이 봉급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받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80년대 관치시대에 면접 때 ‘공무원 봉급은 누가 주나요’라고 물으면 ‘도지사가 봉급을 준다’고 대답한 지방생들이 많았어요.

당시는 회계공무원이 봉급을 준다고 답한 응시생도 있었을 정도로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거죠. 그때 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응시생에게 알려줬어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직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는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소리축예요. 제1회 세계소리축을 기획하고,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분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인 전북이 맛과 멋을 전남광주 김치 축제와 광주비엔날레에 빼앗긴 상황에서 소리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유종근 전 지사와 소리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정읍부시장에서 다시 불려와 구원투수로 세계소리축제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기여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대선 정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입법발의부터 통과까지 18일 만에 이뤄냈다는 긍지가 있어요. 덕분에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도 출범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갈등조정능력을 키웠으면 해요. 이제 행정의 덕목은 갈등조정능력이라 봐요. 아직은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밀어붙이기식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주민을 설득하는 행정이 80%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조정능력은 교육을 통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조정능력은 소통과 공감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http://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415148&code4=PO0100001&page=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는 1개 면을 할애한 ‘전라일보가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란을 통해 박성일 전북도행정부지사를 소개했다. 위 기사는 형식적으로 박 부지사의 퇴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이며, 퇴임 날에 맞춰 보도됐다.

그러나 위 기사는 단순 퇴임 인터뷰가 아니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 준비 중인 박 부지사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출사표를 던졌다』 『고향인 완주 군수와 전주시장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출마할 자치단체, 출마배경, 준비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 박 부지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때문에 위 기사는 박 부지사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재울

〈주문〉

중부일보 2013년 12월 5일자 11면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 안성이 달라졌다」·12면 「황은성 안성시장 인터뷰/民心을 들었다 났다/계사년 안성 핫이슈/한 뼉 더 성장한 市政」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2월 5일자 11면>



<12월 5일자 12면>

중부일보는 ‘경기도가 세계로’라는 섹션을 통해 각각 1개면씩 할애해 안성시와 황은성 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11면 기사는 ‘황은성號 분야별 성과분석’이란 부제로 자치행정, 경제 일자리, 환경, 교육, 문화예술체육, 농정 등 분야별로 안성시가 이룩한 성과를 찬사 일변도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편집자는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안성이 달라졌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황은성 안성시장을 인터뷰한 12면 기사에선 화재 현장을 찾는 황시장의 사진 등과 함께 안성지역 이슈에 대한 황 시장의 입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특별한 계기도 없고, 시간을 다투어 보도해야 할 만큼 뉴스거리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문〉

국민일보 2014년 1월 6일자 10면 「신년초대석 김만수 부천시장/“영화·만화·공연 … 세계적 문화도시 도약할 것”」, 8일자 10면 「신년초대석 송영길 인천시장/“아시안게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겠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만수 부천시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인천과 결합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문화를 매개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5일 부천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천의 지역 특성상 인천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특히 부천에서 생산된 캐릭터가 중국 CCTV의 날씨 안내 캐릭터로 등장한 것을 발판삼아 K팝 이후의 한류열풍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시장은 “땅은 좁고 밀집돼 있는 부천에서는 문화산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화·애니메이션은 세계에서 부천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천시가 프랑스에서 선보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툰 기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적 현상은 독보적 영역이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80~90%가 문화도시가 나갈 길이라고 응답한 점에 주목해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주말을 부천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부천영화제, 부천필공연, 만화축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또 시민화합 차원에서 90만명의 시민 중 10만명이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인구를 3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올해 안에 배드민턴장을 착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수십 곳도 설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천FC와 여자프로농구 등을 활용한 응원문화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김 시장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 상반기 중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는 경인전철 지상구간 33만㎡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는 소사구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대표적인 구도심인 역곡동 화장장 예정부지에 부천대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김 시장은 “옛 부천 중심지인 심곡천의 복개구간을 건

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08784&cp=nv>>

〈송영길 인천시장〉= 『“오는 21일 중국 광저우에서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여는 등 남북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51·사진) 인천시장은 7일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미제’란 용어를 ‘미국’으로 바꾸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변화가 모색되고 있어 올해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시장은 “2010년 취임한 후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며 “북한선수단이 오는 9월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확보해 전임 시장 등이 초래한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것을 재임 중의 성과로 꼽았다. 송 시장은 선수촌·미디어촌을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면서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막았고 리스·렌트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1276억원 규모의 세원을 발굴하는 등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원활한 행정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국정평가 1위를 차지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기업을 유치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사무국을 유치해 전 세계에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깊이 각인시킨 것은 역사적인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송 시장은 인천지역 대표 원도심인 도화구역 활성화 계획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분양 사업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경인전철 제물포역 인근 도화구역 사업지구에서 벌일 계획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화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 2만1090㎡를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급하고, SPC는 이 부지에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오는 4월 중 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 시장은 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활용, 제2의 디즈니랜드가 될 테마마크를 유치해 아라뱃길 일대를 관광벨트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송 시장은 “올해는 인천시가 인구 300만명을 넘어서며 위상이 놀라울 정도로 변할 것”이라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잘사는 인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15366&cp=nv>>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이라는 인터뷰 난을 가독성이 높은 사회면 톱기사로 배치해 김만수 부천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각각 소개했다.

김만수 시장을 다룬 기사는 부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상세히 소개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배드민턴장을 착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수십 곳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착공을 소개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을 다룬 기사는 송시장이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막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원도심인 도화구역 활성화 계획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송시장의 인천 발전 구상을 자세히 다뤘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년 인터뷰 성격이지만 보도시점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김 시장과 송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후보들이다. 송 시장은 이미 재선 도

전 의사를 밝혔고, 김 시장은 내달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상당수 언론이 보도한 상태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두 시장의 재임기간 업적과 장점은 ‘홍보성’으로, 두 시장이 추진할 지역현안은 ‘공약’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위 기사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경쟁상대가 있는 시장 후보인 두 사람을 장점 위주로 다뤄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문〉

경북매일 2014년 2월 6일자 3면 「도교육감 이영우·이영직 양강구도/“3선 연임”-“이번엔 내가” 기사썬 치열/문경구, 참신성·패기 내세우며 도전장」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북매일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교육감 선거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후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는 이영우 교육감에 맞서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 문경구 한국학부모 총연합 공동대표 등이 출사표를 준비중이거나 이미 던졌다. 이외에 한 두명 정도 교육감 후보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교육감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이영우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인 만큼 예비후보 등록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이 자유롭긴 하나, 업무공백이 커 부담으로 작용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선거때 좀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업무공백을 초래, 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교육감은 3월 중·하순경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선에 걸쳐 5년여간 경북교육청을 무리 없이 잘 이끌었고, 여러 가지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시도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내 3선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이영우 교육감의 3선 저지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이다.

현재 포항 영신고 초빙교장으로 재직중인 이 전 교육장은 경북대 사대부고와 사범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의성 금성고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교장, 연구사, 장학사 등을 거쳐 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교육정책국장, 영주교육장을 역임한 만큼, 교육청 내 인맥이 많아 이 교육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교장은 퇴직후 4년 임기의 초빙교장으로 온 만큼 이번달 말까지 1년만이라도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3월초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 든다는 계획이다. 임기 중 선거에 나가는 만큼 학교측에 미안한 마음이 많다. 이 교장은 그동안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인맥의 바탕 위에 정치권 분위기도 우호적이라고 판단, 강력하게 치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 학교의 전 재단이사장인 강석호 국회의원에게 교육감 출마 의사를 알렸고,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철우 현 새누리 경북도당 위원장이 대학후배로 관계가 돈독한 점 등 여러 여건도 성숙됐다고 보고 있다.

강력한 2파전 양상에 문경구 후보도 가세했다. 문 후보는 현재 만 50세의 나이로 젊고 역동적인 참신성을 주무기로 경북교육청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문 후보는 영남대 졸업후 경북의 여러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22년간 근무했다. 교육감 출마를 위해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지만 지난 해 명예퇴직을 하고 선거준비를 해왔다. 그는 4일 예비등록과 동시에 기

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전한 후 영천 호국원을 다녀오는 등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6·4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후보들의 면면을 짚어보는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교육감 후보로는 이영우 현 교육감과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 문경구 한국 학부모 총연합 공동대표 등 3명에다 한두 명 가량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취재기자는 선거 전망과 관련해 이영우 교육감과 이영직 전 교육장의 『2파전 양상』이라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한발 더 나아가 「도교육감 이영우·이영직 양강구도」라고 단정해서 큰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위 기사는 왜 ‘2파전 양상’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현직 교육감과 더불어 이영직 씨를 양강 후보로 꼽은 배경으로는 『폭넓은 경험과 인맥의 바탕위에 정치적 분위기도 우호적』이라는 등 홍보 색채가 짙은 이 씨 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 씨가 과거 선거에 출마해 검증 받은 것도 아니고, 선거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그를 ‘양강 후보’로 꼽고 있다는 부연 설명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특정후보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영권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1월 24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도봉구/창동역 일대 문화·창조산업 중심지 조성」, 2월 4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강동구/도시농업 '강산강소'로 건강한 먹거리 책임진다」, 2월 7일자 29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노원구/창동차량기지 터 비즈니스 메카로 개발」, 2월 11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송파구/잠실·위례 기반, 관광·지식산업 거점 육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핫 이슈로 등장해 있다. 그만큼 지자체장들의 지방살림 챙기기도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를 맞아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새해 살림살이를 짚어본 데 이어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서울 자치구 새살림'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도봉구는 올해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4년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구민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올해는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희망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주요 현안 사업으로 창동·상계지역 개발 본격화,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등 사회간접(SOC) 시설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창동역세권 등 SOC사업 본궤도

도봉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창동·상계 개발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동북권역 체육시설 조성 △창포원 북쪽 대전차 방호시설 개선사업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동역 일대 광역중심 발전 계획의 경우 문화공연인프라와 창조산업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전형필 가옥을 비롯해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돌리뮤지엄,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를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봉산 권역은 생태·힐링·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도봉산 권역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인 점을 감안, 생태·힐링·관광지구와 함께 마을 이름 자체가 힐링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이 구청장은 소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곳에는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뜻의 ‘무수골(근심 없는 고을)’이 있다”며 “이곳을 생태치유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치유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북 4구 공동발전 체제 구축

지난해 출범한 동북4구발전협의회(도봉·성북·강북·노원구의 협력 발전협의체)를 통해 동북 4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우선 동북 4개구가 함께 창동역 일대에 ‘창동문화공연인프라 및 서울창조산업파크’를 구축시킬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생활권 도시계획에 반영돼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 구청장은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며 “도봉구의 살림 역시 경제 상황만큼이나 어렵지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지난 4년여 를 돌아켜볼 때 ‘참여와 복지’라는 기치를 들고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주민 스스로가 보듬은 형태의 복지공동체를 지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의 올해 구정 목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공공텃밭 3800계좌와 상자텃밭 3만계좌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 텃밭을 5300계좌, 상자텃밭은 4만8000계좌로 늘려 보급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우리 강동 지역에서 생산한 배추, 상추 등 농산물을 지역 주민의 밥상에 올리는 이른바 강산강소(江産江消)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농업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산강소는 강동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강동에서 소비한다는 뜻으로 이 구청장이 만들어낸 말이다.

■ 강산강소(江産江消) 역점 추진

강동구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로컬푸드 농산물 직판장인 ‘싱싱드림’을 통해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협의회에 속한 38개 농가로부터 매일 아침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싱싱드림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한다. 생산자가 가격을 직접 정하고 본인의 사진과 정보를 표시해 매장에 진열하면 주민들은 이를 믿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루 평균 250명의 주민이 싱싱드림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게 강동구의 설명이다.

이처럼 강동구는 도시농업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지역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정 내 식탁에 올라가는 데 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구청장은 “유통단계를 최소화시켜 운송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이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지역 농산물을 관내 26개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 식자재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협의회와 관내 음식점을 연결시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중화시키기로 했다.

■ 모든 동네에 건강센터 운영

강동구는 이와 함께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강도시로 발돋움한

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혜택의 격차를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담센터는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측정과 생활습관개선 상담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동네 미니 보건소다. 현재 18개 모든동에 상담센터가 설치돼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0대 이상 주민 28만 5891명의 33%인 9만4907명이 이 상담센터를 이용했다.

이 같은 강동구의 주민 건강 정책은 국내외에서 인정 받았다. 지난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대회에서 이 건강 정책은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강동구 사회조사' 생활환경 만족도 분야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가 구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구정(55.9%)에 꼽혔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040100019900001029&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03

〈김성환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는 전동 열차 차량기지인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이곳을 '동북권 비즈니스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창동차량기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탓에 노원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꼽혀왔다. 구의 노력 끝에 이 기지는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로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곳을 상업·업무 시설 등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구는 또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을 학교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동부권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이 일대는 인근 도봉면허시험장까지 포함해 24만 m^2 의 개발 부지가 생긴다. 이는 강남의 코엑스나 롯데월드보다 넓은 규모다. 노원구는 이곳이 노원 100년 미래를 좌우할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인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까지 통합 개발하면 그동안 낙후된 강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남·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사업은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곳에 대규모 상업·업무·문화시설을 유치해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조화로운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민들이 행복한 도시 육성

노원구는 또 ‘마을 학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에코센터 주변 산책로에 학습테마가 있는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을 조성하고, ‘마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더 내실화한다.

또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학력 인정 ‘맞춤형 대안학교’는 3개소로 확대한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는 확대·발전시켜 소외계층 대상 방문복지에 힘쓸 계획이다. ‘자살예방사업’과 어르신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무연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이 그것이다.

녹색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자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을 통해 건물과 주택을 미니 발전소로 만드는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사업, 서울북부지법 이전부지의 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동북선 경전철 조기 착공, 광운대·석계역 신경제 거점지역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070100064220003412&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06

〈박춘희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는 잠실동의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비롯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및 동남권유통단지, 위례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역이다.

송파구는 이같은 랜드마크 시설과 지역 관광 인프라 연계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관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59)은 “지역개발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발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수년 내 송파가 우리나라 지식기반 및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250만명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송파구로 250만 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구청장은 “전문가들은 송파구에 관련 랜드마크 시설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갖춰진 경우 송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소 4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발전을 예견하고 이미 지난 2012년 3월 올림픽공원, 방이맛골,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등을 아우르는 서울 최대의 잠실관광특구를 지정받았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기존 4개의 관광특구(종로·청계천, 명동·남대문, 동대문, 이태원)의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잠실관광특구는 서울 관광의 미래를 이끌 새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송파구는 관광특구 운영과 관련 관광활성화를 위해 옥외 영업 허용과 함께 관광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확충, 관내 숙박업소의 관광호텔 리모델링화를 통한 숙박시설 업그레이드, 외국인 대상 팸투어, 외국인 대상 관광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개발 주체와 주민, 구청이 참여하는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상설, 운영해 주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지식기반산업, 미래먹거리 허브로

송파구는 2대 미래 먹거리 사업은 관광거점 육성과 지식기반산업의 기반 구축이다. 분양이 완료된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는 정보기술(IT)융합 산업, 예술 콘텐츠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전시·관광(MICE)산업 등이 8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된다.

박 구청장은 “인근의 법조단지 및 오피스텔 등 수요와 맞물려 일반 상가 분량은 벌써 대부분 마무리됐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래형 업무단지 중심을 관통하는 거리형 문화 공간인 ‘컬처벨리’가 앞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귀띔했다.

거대 민간 자본의 투입과는 별도로 송파구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나 영세한 예술인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존 사회적기업허브센터와 일자리센터,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합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마련한 ‘중소기업청 지정 참살이실습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플로리스트 등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오는 2019년에는 송파구는 아파트촌 위주의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나 관광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은 외적 팽창에 걸맞게 사회복지 등 내실도 다져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11010097570005115&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10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를 맞아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서울 자치구 새 살림’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핫 이슈로 등장해 있다. 그만큼 지자체장들의 지방살림 챙기기도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 시리즈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1월 24일자 25면(지역면) 머릿기사로 ‘도봉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월 4일 ‘강동구’ 7일 ‘노원구’ 11일 ‘송파구’를 잇따라 보도했다. 해당 자치단체장의 인터뷰 형태로 자치구를 소개하면서 인터뷰 사진도 실었다. 기사

는 자치단체 탐방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과 발전 구상, 치적 등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동 역세권 사업 본궤도』 『국제대회 건강 정책 최우수상 수상』 『동북선 경전철 조기착공』 『서울 최대의 잠실 관광특구 지정』 등 자치단체장의 사업 구상 혹은 치적 등을 알리고 있다.

소개된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단체장들이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이들 단체장의 장점은 ‘홍보’로, 역점사업은 ‘공약’으로 비쳐질 수 있다. 때문에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문〉

국민일보 2014년 2월 4일자 10면 「최성 고양시장/“시민들 행복·문화도시 자부심 갖게 할 것”」, 2월 6일자 10면 「이인재 파주시장/“국내외 기업 파주 러시 … 국제도시 도약 꿈”」, 2월 7일자 10면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아직 할 일 많아 … 대형사업 완성 4년은 짧다”」, 2월 10일자 12면 「안병용 의정부시장/“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행복도시 만들 것”」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민들에게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자부심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은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해 포부를 밝혔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제일주의 행정 구현, 신한류 문화예술 중심 도시 구축 등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전국 최고 일자리 창출 도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겠다”며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에 40% 이상, 교육분야에 5% 이상 편성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한류 중심도시의 이미지도 완전히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해 보여준 고양시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최고의 일자리 창출도시로 인정받는가 하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페이스북 팬수 5만을 돌파하는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와 시민들의 저력이 뒷받침됐다고 보았다.

“시장이기 전에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고양은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와지 법씨’로 대변되는 5000년의 역사도시임도 입증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인구 99만500여명을 기록한 고양시는 올해 ‘인구 100만 도시’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행정과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이 늘어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자연히 시장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MICE 산업과 한류 방송영상 산업 중심지이자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를 잡고, 고양형 복지브랜드인 ‘고양 복지나눔 1촌맺기’의 정착 등이 이뤄질 것이

라는 설명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98766&cp=nv>

〈이인재 파주시장〉= 『전국에서 국·도비와 외자 유치를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꼽으라면 단연 첫 손가락은 경기도 파주시 몫이다. 지난 3년간 1조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2012년 이후에만 무려 2조 4000여억원의 외자를 끌어들었다. 여기에는 지역의 메리트와 함께 이인재 시장의 저돌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 시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 러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파주를 일약 국제적인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파주 프로젝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파주 하면 임진각, 통일동산,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과 함께 개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이 시장은 단호히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진각 관광지를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어울리는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DMZ 세계평화공원의 파주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실질적인 통일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정 목표에 대해 이 시장은 ‘살기 편한 자족도시’라는 말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통일동산 지구와 산업단지 재개발, 다양한 교육지원,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 보강, 농업과 농촌개발 지원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유달리 큰 관심을 보였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확대, 공공어린이집 추가 설치 등 짜임새 있는 복지정책으로 파주에는 소외계층이 없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 이 시장 취임 이래 지금까지 각종 대회와 평가 등에서 83억여원의 시상금을 받는 진기록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난관리’와

‘청렴도’에서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무한불성’(無汗不成·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이라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06360&cp=nv>>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4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익철(62·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3년여간 활동을 평가하며 6일 이 같이 밝혔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구 발전에 전념해왔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자부심은 임기 중 거둔 성과들에 기반한 것이다.

진 구청장은 우선 1조3000억원 규모의 우면지구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꼽았다. 그는 “서초 삼성타운의 2배가 넘는 이 부지는 당초 4층 이하, 용적률 240%로 묶여 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다”면서 “2010년 취임 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찾아가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이 투자한다’고 설득해 2년 만에 높이 10층, 용적률 360%가 됐고 결국 삼성전자가 부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2015년 5월 완공되면 석·박사 1만명이 상주하는 첨단과학도시가 될 예정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옆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확정된 것도 자랑거리다. “3년 넘게 표류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대안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등 다각적 노력 끝에 의료원 이전비용 165억원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700병상이 넘는 대규모 의료원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욱 살아날 겁니다.”

이는 취임 직후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갖고 추진한 소통행정의 결과라는 게 주위 평가다.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라는 진 구청장은 “구 공무원들과 함께 토착비리 등 관료제 폐해를 척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초구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2010~2011년 연속 행복지수 1위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올해 강남역 일대 및 사당역 주변 방배동 침수예방, 지능형 CCTV 운영

강화, 양육품앗이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권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방배동 '성뒤마을'의 합리적 개발도 관심거리다.

진 구청장은 “다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남역 주변 상습침수 개선 등 못다한 일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하루를 1년처럼 생각하고 주민을 섬기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09788&cp=nv>>

〈안병용 의정부시장〉= 『“모든 시민이 한 가족처럼 어울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특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경기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은 9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을 앞세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안 시장의 시민 행복에 대한 집착은 지난해 시의 성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거기다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 32개의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언급했다. 그는 “의정부시민들에게는 역사적인 자부심과 함께 경기북부 중추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이 있어 시정이 잘 먹힌다”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장가능성이 큰 도시”라고 밝혔다.

교수 출신인 안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다. 생애 첫 도서관 만나기, 청소년 독서골든벨, 시니어 독서스쿨, 북 수레 이동도서관 등은 의정부만의 이색 브랜드다. 교육예산 비중을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이야말로 시민들을 온전히 수혜자로 만드는 최고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미군부대로 몽둥그려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진 도시였다. 하지만 미군부대가 하나씩 떠나면서 많이 변하고 있다. 안 시장은 “반환되는 미군부대 부지에 품격 높은 콘텐츠들을 담아가면 의정부는 분명 미운 오리새끼에서 아름다운 백조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주민 삶의 질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는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21위,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위를 차지했다. 주민행복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한데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한 주변 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회수 시설 이용 전기 생산, 음식물류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등 다양한 재정수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안인 의정부경전철과의 갈등 등도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017926&cp=nv>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최성 고양시장, 이인재 파주시장,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각각 실었다. 기사는 해당 자치단체를 장점일변도로 평가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최성 고양시장을 다룬 기사는 『“전국 최고 일자리 창출 도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겠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에 40% 이상, 교육분야에 5% 이상 편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에 매진할 계획”』이라는 최 시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고양시 활약상 대단』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서 최우수상 수상』 『전국 지자체 최초 페이스북 팬수 5만 돌파』 등의 표현으로 고양시와 최시장의 치적을 평가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을 다룬 기사는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 러시’는 현재진행형”』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이 시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이 시장 취임 이래 83억여원 시상금을 받은 진기록』 『‘재난관리’ ‘청렴도’에서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 『지난 3년간 1조원 이상 국 도비 확보』 등으로 이 시장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첫 문장을 『“4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진 구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다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남역 주변 상습침수 개선 등 못다한 일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편집자도 큰 제목으로 「“아직 할 일 많아…대형사업 완성 4년은 짧다”』고 달았다. 기사는 이밖에 『행복지수 1위 도시 선정』 등의 표현으로 서초구와 진 구청장의 업적을 긍정 평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다룬 기사는 지난해 의정부시가 거둔 성과를 홍보했다. 기사는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거기다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 32개의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역점사업을 소개했고, 편집자는 이 가운데 안 시장의 말을 인용해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행복도시 만들 것”』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칭찬일변도 소개하는 내용들이다. 비록 신년 인터뷰 성격이지만 보도시점과 그 내용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4년은 짧다”며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장들도 우회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서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문〉

경북도민일보 2014년 1월 17일자 4면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까지/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자전 에세이 ‘꿀찌교수’ 출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4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의 자전 에세이 ‘꿀찌교수’(부제 꿀찌학생 서울대 강단에 서다·사진)가 출판됐다.

모 원장의 첫 번째 에세이집 ‘꿀찌교수’는 저자가 어떻게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도전정신을 불태우는 열정’이라고 말한다. ‘꿀찌교수’는 모 원장의 파란만장했던 학창시절에서 시작된다.

학창시절 방황하면서 성적은 꿀찌로 추락했고, 이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아들의 학업을 위해 대구로 전학시킨 사연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전학 이후 모 원장은 뒤늦게 학업에 열중해 대학 진학에 성공한다.

모 원장은 당시 내무부에 입사,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역경제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내무부 지역경제국과 지역발전국에서 전국의 지역경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또 대학 교재로서 스테디셀러인 ‘지역경제정책론’과 ‘지역발전정책론’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전 세계 230개 도시를 돌아보며 견문을 넓히는 등 도전적 삶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8남매를 탈없이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등 가족에 대

한 애뜻한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다.

‘꼴찌교수’출판기념회는 18일 오후 3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미된 공연형식의 북 콘서트로 진행된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58>)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이 ‘꼴찌 교수’라는 자전 에세이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돋보이게 보도했다.

기사는 모 원장의 학창시절과 내무부 공무원 시절, 집필 활동 등을 『치열한 삶』 『백조로 거듭 나게 된다』 『도전적 삶』 『애뜻한 사랑의 감정』 등 감성적 표현을 곁들여 상세히 소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모 원장보다 하루 앞선 2월 17일에 경쟁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는 등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줄을 이은 출판기념회 소식을 함께 묶어 보도했다. 포항시장 선거에는 여권에서만 모두 7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게만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4 신문윤리강령 위반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주 문〉

울산매일 2014년 2월 26일자 1면 「강길부-김기현-김두겸 지지율 박빙/새누리 울산시장 후보 경선 ‘총력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울산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3명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선기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울산시장 출마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예비후보와 출마선언 예정인 강길부·김기현 의원 간 지지율 차이가 최대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후보 간 치열한 총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정갑윤 의원의 울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3자를 대상으로 한 첫 여론조사 결과여서 정 의원의 지지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정 의원의 지지층이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도 마의 ‘30%’대를 넘어서지 못한 채 ‘초반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여의도 연구원의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후보 간 크게 앞서 가는 후보가 없다”면서 “(타 시도와는 달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20%대에 달하는 무응답층”이라면서 “결국 조직력을 겸비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예비후보와 조만간 출마선언이

예고된 강길부·김기현 의원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림은 물론 각 후보 진영은 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실제 선거까지는 시간과 변수가 많은 만큼 현재의 민심이 변화될 여지는 충분하지만 이렇다 할 변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큰 지지율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두겸 예비후보는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없이 지금부터 주타깃은 노동자·서민층이 될 것”이라면서 “무응답 비율이 높은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작고, 어렵고, 추운 곳을 뚝뚝뚝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준비된 시장후보’임을 강조하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강길부 의원은 “2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면서 “출마선언 이후 큰 그림의 공약발표를 통해 지지율 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적 공약을 통한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의 지지율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향후 출마선언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이끌 책임자가 누군지를 울산시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울산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3월초 출마선언과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정책적 비전을 발표해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지율의 높낮음을 떠나 지지율이 우세한 쪽은 필승카드 마련을 위해, 낮은 쪽은 반전카드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 듯 후보별 지지도에 있어서는 특정 후보의 ‘대세론’ 없이 다자간 접전 속에서 초반레이스를 펼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확실한 조직력이 승부의 최대 관건으로 점쳐지고 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57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매일은 지난 2월 26일자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강길부·김기현 의원과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등 3명을 놓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율 차이가 박빙으로 나타났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세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20% 대의 지지율을 보였고, 지지율 차이는 최대 5% 내외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는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비롯해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위 기사가 보도된 직후 새누리당은 대변인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3자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강길부·김기현 두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선거결과 예측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7일 울산매일과 담당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울산매일은 위 기사와 관련한 해명이나 정정보도, 공개 사과 등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강길부·김기현 두 의원의 반발에다, 울산 선관위의 검찰 고발에 앞선 조사 결과까지를 감안한다면 담당 기사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거짓 소문을 기본적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담당기자가 애초부터 특정 후보자를 돕겠다는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도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태도는 공정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⑤(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 「편집지침」 ⑤(기사의 정정)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5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영권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21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강서구/젊은층 가구 많아 … 육아문제 해결에 역점」, 3월 12일자 27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강서구/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40곳으로 늘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월 21일자 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신혼가구나 아이를 가진 20~30대 젊은층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이들의 육아 문제 해결에 구정의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실제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늘면서 어린이집 부족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입소 대상 영유아는 3만33명이지만 전체 어린이집은 425곳으로 전체 보육정원은 1만 6146명이다. 수용률이 전체 수요의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

■ 현재 어린이집 수용률 53% 불과

강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을 포함한 어린이집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맞

별이부부 등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20곳 이상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강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조성한 5곳을 포함해 총 34개소로 정원은 2891명이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17.9%에 불과하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매진해 2018년까지 60곳으로 현재보다 20곳 이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약 3500명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분담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은 물론 공동주택단지 내 건립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재개발 등 재정비구역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공공시설 내 복합설치 등 다각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우선 개인이나 종교시설 등 민간이 제공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의 민관 공동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구립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3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강서구는 더불어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건물 신축 또는 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 건립 초기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여건을 활용해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은 주택밀집지역은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서구는 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2곳 이상 운영해 지역 간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관내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맞벌이부부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의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12일자 강서구〉= 『서울 강서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구정은 ‘도서관 중심도시’ 구축이다.

관내 곳곳에 구립도서관을 개관하고 공공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는 ‘포켓도서관’을 대거 들일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민선 5기 들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를 구정 목표로 정하면서 도서관 확충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4개에 불과하던 구립도서관은 현재 7개로 늘었다. 서울지역 상당수 자치구에 구립도서관이 3~5곳임을 고려하면 많은 수준이다.

■ ‘도서관 천국’으로 탈바꿈

11일 강서구에 따르면 탄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특성화된 도서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2년 등빛도서관과 강서영어도서관을 건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곰달래도서관까지 3개의 구립도서관을 신설했다. 이들 도서관의 회원 수만 해도 7만7000명이 넘고 지난해까지 이용객은 130만명에 육박했다.

또 지난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1동 1작은도서관’ 확충 사업도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화곡3동 책마루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관내 20개의 모든동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됐다.

노 구청장은 “주민이 언제든지 도서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도서 대출과 열람에만 머물러 있던 지역 내 모든 동 주민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40곳을 개관할 계획이다.

■ 복합도서관 운영 통해 내실화

동 주민센터 건물 안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 주민의 호응도 좋다. 지난해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구민이 130만명에 달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는 11만권이 넘는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펼친 결과다. 작은 도서관은 문화복합센터 기능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의 고유기능은 물론 세미나, 연주, 상영, 전시회까지 가능하다.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소통과 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서 여름방학특강, 작가와의 만남, 부모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네일아트·독서논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어린이에게는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강서구는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작은도서관마다 전문사서를 배치했다.

노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 운영해 각종 행사 및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컨설턴트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120100112590005884&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1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자치구 새 살림’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면서 20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강서구와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소개했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포맷으로 노 강서구청장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 탐방 형태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내용의 노 구청장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또한 단체장의 역점사업과 발전 구상을 다루고 있다.

2월 21일자 기사에선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60곳으로 늘려 젊은층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또 공공주택단지의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구립화한다는 계획도 보도했다.

3월 12일자 기사에선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을 40곳으로 늘려 강서구를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정 목표를 소개했다. 또 작은 도서관을 모든동에 설치해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단체장 구상도 전했다.

그런데 노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노 구청장의 장점은 ‘홍보’로, 역점사업은 ‘공약’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제 강서구가 기사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도

서관'의 설치 목표연도 2018년은 올 7월부터 시작될 민선6기와 겹쳐있어 사실상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를 차례로 소개하는 기획에 특정 자치단체와 장을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 다루는 것은 보도 관행상 보기 드문 경우다. 파이낸셜뉴스가 위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밝힌『새해를 맞아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살펴본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재되고 있는 위 시리즈는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나 걸쳐 특정 자치단체와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문〉

국민일보 2014년 3월 4일자 10면「성장현 용산구청장/“명문학교 육성 … 강북 교육 1번지 만들 것”」, 3월 7일자 10면「차성수 금천구청장/“역점뒀던 교육·복지 개선사업 마무리 원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의 학교들이 명문의 조건을 갖춰 교육 일등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현(59·사진) 서울 용산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용산을 ‘강북 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3일 밝혔다.

학교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에 공을 들였으며, 공교육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 학생들이 적성과 특기를 살리고 입학사정관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민·산·학 업무협약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다고 성 구청장은 소개했다.

용산구는 민선 5기부터 100억원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15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물론 체육, 예능,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5개 언어와 문화를 월 2만원에 배울 수 있는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보습학원연합회와 연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 학원 수강권을 제공하는 ‘호프업 드림업(Hope Up Dream Up)’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과 ‘현장’은 용산 구정의 주요 키워드다. 성 구청장은 취임 이후 매주 목요일 구청장실 문을 열어 구민들을 만났다. 지난 3년여간 구민 1058팀 1872명이 찾아와 1021건의 민원을 제시했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해결됐다. 또 현장을 누비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행정에 반영해왔다. 그는 “지역·계층·정당 간 갈등을 허물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를 위해 달려 온 게 민선 5기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원효로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성 구청장은 “주민 동의 없이 마권 장외발매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발매소는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구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99496>〉

〈차성수 금천구청장〉= 『“4년 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옛 군부대 부지 개발, 교육·복지 여건 개선 등 임기 중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성수(56·사진) 서울 금천구청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5기 임기 동안 하드웨어(지역개발)와 소프트웨어(교육·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적고 중심기능도 미흡한 데다 도로와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구로공단의 72%가 속할 정도로 서울에서 중소제조업, 특히 IT제조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밀집돼 있는 데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미개발지인 대규모 나대지가 10만평이나 되는 것도 강점으로 꼽았다.

차 구청장은 지역의 이런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취임 전 20억원 수준이던 교육 관련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렸고 교육담당관 신설 및 직원 확충, 멘토장학금 운영,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성적향상도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단연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이는 인구유출 감소 및 군부대 부지 아파트 분양 호조 등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 뒤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으로 금천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2017년말까지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아파트 3200여 가구, 오피스텔 1200여실, 업무·상업시설, 관광호텔, 초등학교와 경찰서, 공원, 문화·체육·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가 도입됐다.

그는 “재선이 되면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개발에서 소외된 단독주택 위주의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11113>>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성장현 용산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고 이들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강북 교육 1번지’ 정책 추진』 『100억원 장학기금 조성 목표로 매년 10-15억원 적립해 지원』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 등 성 구청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무료 학원 수강권 제공하는 ‘호프업 드림업’사업 호응』 『매주 목요일 시민과의 만남 통해 1021건 민원 청취,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 해결』 등으로 성 구청장의 치적을 평가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제목을 「“역점됐던 교육·복지 개선사업 마무리 원해”」로 달고, 본문 첫 문장을 『“4년 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옛 군부대 부지개발, 교육 복지 여건 개선 등 임기 중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차 구청장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재선 희망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재선이 되면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며 사실상 선거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는 이밖에 『20억원 수준이던 교육관련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의 기술로 금천구와 차 구청장의 치적을 긍정 평가했다.

이들 단체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때문에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에 신년 인터뷰이지만 보도시점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내용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실제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4년 더 기회를 달라”며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성장현 구청장도 자신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단체장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

혹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2013-1116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3년 4월 11일자 B5면 「갤럭시 스튜디오 in Campus 크리슈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만든다」 기사의 제목 및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모빌리아르부스(Mobiliarbus)!” 해리 포터가 마술봉을 들고 주문을 외치자 의자가 스르르 움직인다. 삼성 ‘갤럭시 S펜’을 뽑아들자 축구로봇이 리오넬 메시처럼 볼을 몰아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다.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는 상상 속의 일이 현실이 되는 곳이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강풍 속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광운대 캠퍼스에 설치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로봇축구 배틀이 벌어지고 있는 부스에서는 응원과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바로 옆에서는 사진반 학생들이 ‘S펜’으로 크리에이티브 포토를 제작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대형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체험 존에서는 학생들이 갤럭시 노트Ⅱ와 갤럭시 노트10.1의 ‘이지 클립’을 활용해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낸 학교 홍보 티셔츠를 만들고 있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전공서적을 손에 든 학생들이 노트10.1의 필기 노하우를 배우고 있었다.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광운대 경영학부 3학년 이상덕 씨(25)는 “이렇게 신기한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며 “S펜만 있으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하반기에 시작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행사는 이미 3000회를 돌파했다. 방문 고객이 50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이곳을 찾은 셈이다. 이 정도면 ‘국민 체험 프로그램’이라 부를 만하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제품의 혁신적인 성능을 소비자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탄생했다. 개별 부스에서는 ‘갤럭시 앰배서더’들이 갤럭시 제품을 활용해 만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과 소통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단순한 제품 체험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고객들이 갤럭시 시리즈의 독창적인 사용법을 찾아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이 생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크리슈머(Cresumer Creative와 Consumer의 합성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크리슈머는 제품의 가치와 스토리를 찾아내 주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이끌어 간다. 이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생명력이 길고 영향력도 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는 제품 혁신에 발맞춰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진화 중”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접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포토&」라는 문패를 달아 1개면 전체를 할애해 광운대 캠퍼스 안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대서특필했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갤럭시 노트Ⅱ’와 ‘갤럭시 노트10.1’ 등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다.

東亞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는 상상 속의 일이 현실이 되는 곳이다』 등 감성적인 문구를 곁들여 ‘갤럭시 스튜디오’와 삼성전자 제품들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으며, 「갤럭시 스튜디오 in Campus 크리슈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만들다」라는 큰 제목에 덧붙여 기사 중간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혁신적 기능 체험», 「국민 체험 프로그램», 「크리슈머와 새로운 가치 창조」 등 광고카피를 연상케 하는 작은 제목들을 돋보이게 달았다.

또 「Samsung」 로고와 제품 브랜드 등이 노출된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2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3년 3월 22일자 별지섹션 「물의 날, 똑똑해진 세탁기」, 4월 3일자 별지 섹션 「명품의 향기」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중앙일보의 3월 22일자 「물의 날, 똑똑해진 세탁기」 섹션은 삼성 버블샷 세탁기를 홍보하는 기사 4건과 관련 사진 4건, 그래픽 2건, 절수 안내 기사 1건, 삼성버블샷 세탁기 전면 광고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 3일자 「명품의 향기/셀레브리티의 잇 아이템 구찌」 섹션은 구찌 상표의 가방과 구두, 구찌 회사 등을 홍보하는 기사 5건, 구찌가 제공한 관련 사진 14

건, 구찌 전면 광고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섹션을 각각 특정 브랜드 제품의 홍보를 위해 할애한 것이다. 이처럼 파격적이고 노골적인 섹션 제작은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지면 제작과 광고 수입이라는 상업적 거래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기사의 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상품과 업체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기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44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3년 5월 10일자 주말섹션 LET'S (Leisure & Outdoor) 중 C1면 「브라이틀링 제트기 탑승 비행체험 환상의 순간들/기체 치솟자 머릿속 피가 목 밑으로 쏟렸다」 제목의 기사, C2면 「항공기와 시계의 정밀함, 브라이틀링 정체성이 되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東亞日報는 주말 별지섹션 LET'S (Leisure & Outdoor)의 1, 2면을 할애해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인 브라이틀링을 다루었다.

東亞日報는 브라이틀링 사가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방한해 제공한 제트기의 취재기자 시승기를 1면에 게재했고, 2면에는 「항공기와 시계의 정밀함, 브라이틀링 정체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브라이틀링 시계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브라이틀링 사는 평소 항공기와 시계의 정밀함을 자사의 정체성, 즉 상징적인 홍보 이미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가 브라이틀링 시계를 홍보하기

위해 이 회사가 제공한 제트기까지 시승하면서 그 시승기를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파격적 형태의 홍보기사는 신문사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상품과 업체에 유리한 편파적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김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3년 5월 6일자 18면 「“포기했던 허리뿐만 아니라 화병도 고쳤죠”/침도문화보급 캠페인 ⑧허리수술 환자들」 기획 제목의 관련 기사 4건, 5월 13일자 18면 「부부·남매가 함께 깨끗한 세상 만났다/안경 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 ④가족 노안수술」 기획 제목의 관련 기사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적시 기사들은 일간스포츠가 펼치고 있는 ‘침도문화보급 캠페인’과 ‘안경·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과 관련해 각각 매월 1차례씩 전면을 할애해 내보내고 있는 기사들이다.

일간스포츠는 그러나 캠페인 시작 이후 이제까지 ‘침도문화보급 캠페인’은 서울원광한방병원과 이진목 원장을, ‘안경·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은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이러브안과와 박영순 원장을 선전하는 광고와 다를 바 없게 지면을 꾸몄다.

위 지면에서도 일간스포츠는 각각 3건의 치료체험 사례를 홍보성 짙은 문구

를 섞어 상세히 소개하면서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치료와 관련한 문답 박스의 제목도 「이건목 원장 Q&A」, 「박영순 원장의 Q&A」라고 각각 달았으며, 지면 위쪽에는 원장과 환자가 함께 찍은 큼지막한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들은 특정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4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스포츠경향 연재만화 「노숙왕」(박인권 작품) 2013년 5월 3일자 17면 제20화 「아주 특별한 초대」 8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만화는 주인공이 승용차를 모는 장면에서 승용차 앞 부분에 'KIA'라는 특정 자동차회사의 로고를 뚜렷하게 내보냈다.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 간접광고(PPL)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문제의 장면은 특정업체의 영리를 돕기 위해 묘사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0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별지섹션 'TOUR WORLD' 2013년 6월 3일자 B3면 「일본 북알프스 신비에 빠지다」, 6월 10일자 B3면 「빼곡한 돌기둥 절경」, 6월 17일자 B2면 「에 메랄드빛 바다·하얀 백사장서 캠핑을」 제목의 기사 등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매일경제는 8면 짜리 별지 섹션 'TOUR WORLD'에 국내외 관광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들을 게재하면서 상당수 기사의 말미에 특정여행사 한 곳을 추천했다. 해당 국내외 관광지를 오가는 여행사 상품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곳만 기사에서 추천한 것은 사실상 특정여행사를 홍보하는 것과 다르없다.

매일경제는 지난해에 같은 방식으로 별지섹션 'TOUR WORLD'를 제작하면서 여행안내기사에 각각 관련 상자 기사를 몰리고 이 상자 기사를 통해 특정 여행사를 소개해오다 본 위원회로부터 두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유사한 홍보성 지면제작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로 신문윤리위원회 제862차, 제863차, 제865차 회의에서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기사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위해 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버리고 독자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4.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5.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7.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문〉

東亞日報 2013년 5월 24일자 C3면 「LET'S Outro」 면의 기사들, 문화일보 5월 24일 19면 「기획특집」, 6월 13일자 26·27면 「특별기획」의 기사들, 헤럴드경제 5월 28일자 20·21면 「해외투자도 '스마트 시대」, 5월 30일자 19면 「행복한老테크」 면의 기사들, 경향신문 5월 29일자 18면 「특집」, 6월 14일자 19면 「특집」, 6월 17일자 20면 「자동차」 면의 기사들, 머니투데이 6월 13일자 18면 「진화하는 보험상품」, 6월 14일자 25면 「하반기 유망종목」 면의 기사들, 매일경제 6월 13일자 C4·C5면 「톡톡 이 상품」 면의 기사들, 세계일보 6월 13일자 19면 「부동산분양 특집」, 6월 17일자 24·25면 「병원특집」 면의 기사들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각각 1개면 또는 2개면 전체를 할애하여 특정한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장점일변도의 기사로 다루었다. 위 신문들은 자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홍보함으로써 광고와 다름없는 기사를 제작,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특정기업과 상품·업체에 대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정보를 편파적으로 왜곡해 전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3년 6월 10일자 15면 「기업&피플 인사이트」면 기사 7건, 6월 14일자 15면 「기업&피플 인사이트」면 기사 8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업&피플 인사이트」면 전면을 할애해 특정 기업과 상품, 대학, 병원, 인물 등 다양한 대상들을 광고와 다름없이 홍보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기사들은 작성자의 크레디트도 없이 특정 업체나 상품, 인물 등을 사진이나 로고 등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나 제품, 인물, 그리고 해당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2.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3.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주문〉

국제신문 2013년 5월 31일자 「바다의 날 특집/‘아시안 게이트웨이’ 부산항서 만나요」 별지 섹션, 每日新聞 5월 31일자 「영남이공대학교 입학 특집」 별지 섹션, 부산일보 5월 31일자 「바다의 날 특집/바다가 우리의 미래다」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특정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대학이나 기업들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다. 위 신문들은 홍보기사를 게재한 대학과 기업들의 광고를 섹션 지면에 함께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대학과 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대학과 기업의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문〉

영남일보 2013년 7월 13일자 3면 「“수성 고량주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유〉

영남일보는 고량주를 생산하는 업체인 ‘수성고량주’의 사장을 인터뷰하면서 관련 회사와 제품을 전면을 할애해 대서특필했다.

기사는 ‘수성 고량주’의 부침의 역사를 소개하고, ‘수성고량주’의 맛과 향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편집자는 「“수성 고량주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라는 큰 제목과 「그 술, 지키고 싶었다」 「향만 맡아보십시오」 「중국인들도 “땡호와”」라는 작은 제목을 각각 달았다. 광고를 방불케 하는 내용의 문구다.

이 지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사진 역시 기업의 CEO를 광고모델로 활용하는 광고기법을 연상케 하고 있다. 사진 속 이승로 사장은 수성고량주가 그동안 생산한 모든 제품을 앞에 최근 출시한 것으로 보이는 고량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제작방식은 독자나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더러 특정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203.228.23.102/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713.010030752000001>〉

▲ 2013-122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3.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주문〉

경향신문 2013년 7월 18일자 「헬스경향」 별지 섹션, 중앙일보 7월 18일자 「시선집중」 별지 섹션, 朝鮮日報 7월 25일자 「조선비즈 특집/스마트클라우드 쇼」 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31일자 「Real Estate」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별지 섹션의 일부 지면에 걸쳐 특정 업체, 단체, 상품에 대해 장점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3.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8월 27일자 23면·9월 10일자 22면·9월 11일자 14·15·18·19면 「기획」 면제목의 기사 30건, 헤럴드경제 8월 27일자 22면 「가을 분양시장」 면제목의 기사 7건, 머니투데이 9월 2일·9월 3일·9월 4일자 18·19면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면제목의 기사 48건, 매일경제 9월 12일자 B4·B5면 「톡톡 이 상품」 면제목의 기사 10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발행일에 따라 각각 1개~2개면 전체를 할애하여 특정한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장점 일변도의 기사로 다루었다. 위 신문들은 자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홍보함으로써 광고와 다름없는 기사를 제작,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특정기업과 상품·업체에 대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정보를 편파적으로 왜곡해 전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4.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문〉

부산일보 2013년 8월 20일자 「취업 잘되는 전문대학」 별지 섹션, 대구일보 8월 28일자 24면 「“강한 생명력 탁월한 해독력 … 통풍 성인병 치료효과”」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9월 5일자 9면 「특집/경북의 신성장 동력 ‘물 산업’/세계 3대 국제물주간 행사로 육성 … 동아시아 대표 브랜드화」 제목의 기사, 光州日報 9월 6일자 10·11면 「기획/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등반/결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부산일보는 ‘2014 전문대 수시전형’을 주제로 12개면의 별지섹션을 제작하면서 9개 전문대의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대학 광고도 함께 실었다.

대구일보는 1개 면을 할애해 ‘미산약초농장’의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이 농장이 생산하고 있는 어성초 등 약초를 홍보하고, 같은 지면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영남일보는 특집 1개 면을 할애해 ‘경북의 물 산업’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지면에 관련 광고를 함께 실었다.

光州日報는 2개 면을 할애해 아웃도어 업체인 밀레와 공동 기획한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에 대한 결산을 기사를 게재하면서 밀레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밀레 광고를 같은 지면에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의 영리와 해당 대학, 자치단체, 업체의 홍보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광고를 신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6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朝鮮日報 2013년 9월 23일자 「버버리 트렌치코트」, 9월 27일자 「불가리」 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7일자 「Carl Schmidt」 별지 섹션, 9월 30일자 B5면 「포토&」 제목의 「버버리 아트 오브 더 트렌치 서울을 수놓다」 제목의 기사와 사진들, 중앙일보 9월 30일자 「시간의 장인, 까르띠에」, 10월 18일자 「하이 주얼러, 불가리」 별지 섹션에 대해 각각 '경고' 한다.

〈이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각각 특정 브랜드의 상품 홍보를 위해 별지 섹션을 맞추어 제작하거나 1개 면 전체를 특정 브랜드 홍보지면으로 꾸몄다.

朝鮮日報는 두 차례에 걸쳐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해 각각 영국 의류 브랜드 버버리의 트렌치코트와 이탈리아 보석 브랜드 불가리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기사와 사진물, 광고를 게재했다. 또 東亞日報는 독일 주방기구 '칼 슈미트'의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해 홍보 기사와 사진물, 광고를 게재했으며 한 차례는 본지면 1개 면에 '포토&'이라는 면 제목을 내걸고 영국 의류제품 버버리의 트렌치코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중앙일보 역시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시계 브랜드 까르띠에의 제품과 이탈리아 보석 브랜드

불가리의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각각 제작, 홍보기사와 사진물, 이들 제품의 광고를 게재했다.

신문사가 오직 특정 상업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섹션, 또는 별도의 지면을 제작하는 것은 신문 윤리를 전적으로 위반하는 행태이다.

이러한 지면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기본사명이라 할 언론의 책임과 언론의 독립,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언론의 독립」,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6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3년 10월 21일자 18면 「어떤 각도에서 사진 찍어도 자신 있어요」/아름다운 얼굴 만들기 안면윤곽수술」 제목의 기사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제목의 관련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전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은 마르지 않는다. 예뻐질 수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한다. 그러나 ‘성괴’ ‘강남미인도’ 같은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 성형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 수술 시간이 길면 그

만큼 후유증이 커지게 된다.

이제는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장인 환자가 주말에 시술받고 다음주 초에 출근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성형수술 18년 경력을 가진 김동하 비포(BEfor)성형외과 원장의 'SSQ안면윤곽술'은 사각턱 수술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는다. 짧은 수술 시간은 여러가지 장점을 동반한다. 성형수술을 한 지 모를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준다. 지난 16일 안면윤곽술 시술을 참관한 후 이 수술을 받은 세 명의 환자를 만났다.』

(<http://isplus.joins.com/article/810/12909810.html?cloc=>)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전문과 관련 기사들은 일간스포츠가 새로 시작한 '아름다운 얼굴 만들기 캠페인' 지면에 실린 것들로 '안면윤곽수술'에 대한 기사들이다.

일간스포츠는 그러나 김동하 비포(BEfor)성형외과 원장이라는 특정 인물과 병원을 선전하는 광고와 다를 바 없게 지면을 꾸몄다.

사례로 내세운 여성 환자 3명에 대한 인터뷰 모두가 김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얼굴 고민을 해결했다는 내용이고, 안면윤곽수술에 대한 문답 박스의 제목도 「김동하 원장 Q&A」라고 달았다.

기사들은 '수술 후 자연스러운 모습에 기뻐다'는 식의 홍보성 문구로 일관했을 뿐 수술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지면 중간에는 김 원장과 수술을 받은 여성 2명이 함께 찍은 큼지막한 사진과 더불어 환자 2명의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는 특정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0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문〉

부산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자동차 특집/2013년 가을 지상모터쇼」 별지 섹션, 每日新聞 11월 5일자 16, 17면 「자동차」면 제목의 기사 7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자동차를 주제로 별지 섹션과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해당 지면에 출시된 특정 자동차에 대해 장점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다. 게다가 위 신문들은 홍보기사를 게재한 자동차 중 상당수 광고를 별지 섹션 및 특집 지면에 함께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의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3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3년 12월 10일자 「척추·관절 으뜸 지킴이」 별지 섹션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중앙일보는 '세바른 병원'이라는 척추·관절 전문 병원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기사와 관련 사진으로 다룬 4면짜리 별지 홍보색션을 제작했다. 중앙일보는 1·2·3면에 관련 기사와 사진, 그리고 광고를 게재했으며 4면에는 이 병원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신문사가 경제적 대가를 위해 오직 특정한 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색션을 제작하는 것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언론의 책임과 언론의 독립,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언론의 독립」,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2.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한국경제 2014년 1월 8일자 B6~B7면(「화제의 분양 현장」)의 「층수 달리해 조망권 확보 … 교통여건 우수/울산 범서 사랑의 부영」 등 13건의 기사, 서울경제 1월 13일자 B1면 「'홍행 보증수표' 위례 동탄2 잡아라」·B3면 「위례 동탄2을 7,000여 가구 분양」 및 「내달 분양 스타트 이곳을 주목하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한국경제는 부동산 면에 부영주택이 울산 범서지구에 분양하는 '울산범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비롯해 '오천 서희스타힐스' '남양주 퇴계원 힐스테이트'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 등에 대해 사진을 곁들여 장점만 일방적으로 서술했다.

서울경제는 위례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를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또 편집자는 「'홍행 보증수표' 위례 동탄2 잡아라」, 「뜨거운 청약 열기 예고」 등 광고를 방불케 하는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54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문〉

경북매일 2014년 2월 4일자 12면 「눈꽃산행 필수 아이템 챙기셨나요?/■겨울철 등산 필수품 제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LG패션의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라푸마는 올 겨울 눈꽃산행을 계획하는 이들의 안전한 등산을 위한 필수품을 제안한다.

겨울 산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위를 완벽하게 막아줄 해비 다운점퍼가 중요하다. LG패션 라푸마의 윈정복은 완벽한 방풍성과 우수한 발수성, 최고의 투습성을 지닌 윈드 스타퍼 2L원단을 사용해 외부로부터 칼바람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내장된 충전재가 젖지 않도록 지켜준다.(중략)

스패츠(spats)는 등산화 속에 눈이나 흙, 모래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목에 차는 커버장비로 이물질뿐만 아니라 바람도 막아줘 보온 효과를 극대화 해준다. 라푸마의 스패츠는 방수, 투습, 통기성으로 유명한 소재인 고어텍스가 사용된 제품으로 언제나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해주며 패커블 포켓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

등산화 바닥에 부착해 쓰는 아이젠은 겨울 산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빙판이나 다져진 눈길을 걷는 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지녔다. 라푸마 노말 체인 아이젠은 전, 후면 분리형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경량 피그로 편안한 착용감과 접지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우수한 내구성의 고탄력 고정밴드로 탈착이 용이하다.『후략』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2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은 겨울철 ‘눈꽃산행’에 필요한 등산복과 장비 등을 안내하는 취지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시종일관 LG패션의 ‘라푸마’라는 특정 브랜드 상품만을 돋보이게 소개했다.

기사는 『완벽한 방풍성과 우수한 발수성, 최고의 투습성』 『탁월한 복원력』 『보온효과를 극대화』 『쾌적한 착용감』 『편안한 착용감과 접지력』 등 광고 카피를 연상케하는 판촉성 문구를 곁들여 ‘라푸마’ 제품을 홍보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나 해당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東亞日報 2014년 2월 25일자 「자생한방병원」 별지 섹션, 朝鮮日報 2014년 3월 3일자 「버버리」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각각 ‘자생한방병원’이라는 특정 병원과 ‘버버리’라는 특정 브랜드만을 위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기사와 관련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東亞日報는 전국 체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을 주제로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 병원의 시술, 치료법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생 체험기’를 싣고 비수술 치료를 홍보했다. 해당 지면에는 이 병원을 안내하는 광고를 실었다.

朝鮮日報는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를 주제로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버버리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해당 지면에는 이 버버리 광고를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 병원 또는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병원과 기업만을 위한 섹션으로 이 병원과 기업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머니투데이 2013년 8월 4일자 「[사진]아이파크몰 '더위와 한판승부, 물총 서바이벌' 이벤트」 제목 등 7건의 사진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더위와 휴가철이 한창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워터파크에서 어린이들이 악당 캐릭터로 분장한 도우미들과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매 주말 오후 2시30분, '여름 악당과의 한판승부, 물총 서바이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http://www.mt.co.kr/photonews/photovod_view.html?no=201308041341559690&cate=4000&cType>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특정 업체의 워터파크 이벤트를 소개하면서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사진을 제목만 약간 바꾸고 같은 사진 설명을 달아 6분 사이에 8차례

게재하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같은 종류의 물놀이 시설 가운데 특정 업체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네이버 기사 목록 난 캡처



▲ 2013-3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3년 11월 25일자 「폭 자고 잘 먹는데 몸이 허하면 경옥고 한 번 복용해보세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폭 자고 잘 먹는데 몸이 허하면 경옥고 한번 복용해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2013.11.25 00:10

왕실에서 애용한 3대 명약

인삼·생지황·복령·꿀로 구성된 경옥고는 피로회복·혈액순환·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인 전통 한방처방이다.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갈망이다. 중국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는 데 집착하고, 현대인이 각종 영양제와 건강·보양식을 챙겨먹는 이유다. 우리의 옛 선조 역시 무병장수를 위해 ‘이것’을 복용했다. 조선 시대 명의 허준이 ‘최고의 명약’으로 꼽은 경옥고(瓊玉膏)다. 허준은 “27년 동안 먹으면 360세를 살고 64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500세를 살 수 있다”며 경옥고의 효능을 높이 평가했다. 급격한 추위로 몸을 보하는 노하우가 절실한 초겨울, 선조의 지혜가 담긴 전통 한방처방 경옥고의 효능을 알아본다.

경옥고는 공진단·청심환과 더불어 3대 한방 명약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건강을 위해 바쳐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왕실과 고위 양반층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귀한 보약이었다. 원광대 약학과 손동환 교수는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 시조 쿠빌라이칸은 원기회복을 위해 평생 경옥고를 먹었다고 전해진다”며 “얼굴(건강)을 옥처럼 가꾸기 위해 먹는다는 의미에서 ‘경옥고’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경옥고를 구성하는 약재는 인삼·생지황·복령·꿀이다. 이를 한데 섞어 오랫동안 끓이면 걸쭉한 액체 형태의 경옥고가 완성된다. 손 교수는 “각 약재만으로도 좋지만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숙성되면서 효능이 배가 된다”고 말했다.

경옥고의 효능은 『동의보감』에 상세히 기록돼있다. ‘양성연년약이(養性延年藥餌,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편에서 “정(精)과 수(髓)를 보충하고 허한 것을 채워주며 진기를 고르게 한다. 원기를 보해 늙은이를 젊게 하고 온갖 병을 낮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진다.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진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허준은 ‘성약(聖藥)’이라 표현할 정도로 경옥고를 최고의 약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피로회복·혈액순환·면역력 증가에 효과

경옥고가 내세우는 효과는 피로회복이다. 손동환 교수는 “폭 자고 잘 먹어도 항상 피로한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생약 중의 왕으로 꼽히는 인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영양분의 흡수를 돕는다. 항피로·항스트레스 작용이 매우 활발해 원기회복에 탁월하다.

생지황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예로부터 허약 체질·토혈·코피·자궁 출혈·생리불순 등에 사용해왔다. 피를 맑게 하고 조직 내의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복령과 인삼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특히 복령은 쇠약해진 원기를 보충하고, 위장·비장의 기력을 돕는다. 손 교수는 “요즘 같이 갑작스런 추위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절기에 더욱 좋다”고 말했다. 꿀(봉밀)은 특유의 해독작용으로 신체 곳곳의 통증을 감소시킨다.

손 교수는 “이 밖에도 경옥고는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갱년기증후군·만성변비·지구력 증강·다이어트 공복감 해소에 좋다”며 “한마디로 허약한 몸을 두루 튼튼하게 만드는 명약”이라고 덧붙였다. 타고난 허약체질이거나 질환·수술로 체력이 떨어진 사람, 스트레스·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 산후조리 중인 임산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만성위장병 환자 등에 권할 만하다.

최근에는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입증됐다. 경희대 약대 류종훈 교수팀이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시킨 쥐에게 1일 1회씩 7일간 경옥고를 투여하고 단기기억·시물인지기억을 측정했다. 그 결과, 유의적인 기억력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손 교수는 “기억력이 감퇴하는 노인에게 치매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없는 게 특징, 복용 시 쇠수저 피해야

경옥고를 제조하려면 상당한 정성이 필요하다. 80~9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3~5일 동안 밤낮으로 중탕해야 한다. 경옥고가 대중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제조기법을 재현하면서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중 원광제약은 70년의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보화 경옥고’를 선보였다. 경옥고 특유의 이물감을 제거해 목넘김이 좋다. 종양억제인자(TNF)의 역할을 하는 신규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손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를 통과한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모든 것을 식약처가 보증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경옥고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하루 2회 공복에 약 20g을 수저로 떠먹거나 미온수에 타먹는다. 개봉 후 변질을 피하려면 냉장 보관하고, 쇠로 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1322141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전통 한방 처방약인 경옥고의 효능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문헌적 고증과 전문가의 의견을 곁들여 작성된 위 기사는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사 말미에 특정 제약사의 경옥고 제품을 소개하였다.

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성분으로 제조한 다수의 다른 제약사의 경옥고가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사의 제품만을 상품명까지 적시해 소개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보도하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 위 기사가 비록 건강관련 기획물의 일부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배제하고 특정 상품만을 소개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

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 2013년 12월 19일자 「이제는 新중년시대!허리통증보다 무서운 수술 공포 … 고주파로 말끔히 제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남초이스병원

기사입력 2013-12-19 03:00:00 기사수정 2013-12-19 03:00:00



가수 휘성(왼쪽)은 최근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다 고주파 특수 내시경 치료술을 받고 증상을 말끔히 털어냈다. 휘성이 시술을 담당 한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과 함께 웃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최근 KBS 2TV '불후의 명곡'과 JTBC '히든싱어'에서 우승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휘성(31). 하마터면 그는 군 제대 뒤 꿈꾸던 연예계 활

동을 재개하지 못할 뻔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생활을 하면서 악화된 허리통증 때문이었다.

제대 뒤 병원을 찾은 휘성에게 내려진 진단은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말기였다.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다. 국소 마취 뒤 미세 특수 내시경으로 염증 부위의 병변을 제거하는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을 받았다. 그 결과 휘성은 통증을 말끔히 씻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활동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인 추간판(디스크)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빠져나오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추간판은 평소 등뼈에 유연성을 더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추간판이 제자리에서 이탈하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이 일어난다.

이 병의 주된 원인은 노화다. 척추의 노화는 이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이때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 막에 균열과 파열이 나타난다. 이처럼 이미 추간판과 주변 조직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 추간판 막이 찢어지고 제자리를 이탈하면서 병이 악화된다.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증상은 심각한 요통이다. 탈출한 추간판이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때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도 동반사다. 심할 때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하지마비, 대소변 기능 및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위협할 수 있다.

치료법으로는 크게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을 들 수 있다. 초기 증상이거나 환자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권장된다. 소염 진통제 복용, 보조기 착용, 열·초음파 치료, 피하신경 전기 자극 등이 있다. 치료사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만들어 척추뼈를 바로잡는 ‘도수감압치료’와 최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감압치료’ 역시 요즘 각광받는 치료법이다.

수술적 요법은 보존적인 치료를 3개월 이상 실시해도 효과가 없는 중증 환자,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기

존에는 추간판 탈출 부위를 직접 절개해 수술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미경, 내시경, 레이저 등을 이용한 수핵 절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도 늘어가는 추세다.

휘성이 받은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강남초이스병원이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시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뿐만 아니라 재발하거나 아예 터져버린 추간판과 퇴행성 협착증에까지 치료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수술 외적 요법으로 꼽힌다.

이 병원엔 또 노인이나 고혈압 당뇨 뼈엉성증(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도 시술 받을 수 있는 ‘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함께 시술하고 있다. 이 시술은 국소 마취 아래서 1.5mm 굵기의 미세 내시경을 아픈 부위에 집어넣어 돌출된 추간판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쏘면서 염증 부위를 제거한다. 추간판 탈출증에 동반된 신경근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의 크기도 줄일 수 있다.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배우 윤계상 씨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잠자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은 직후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다. 수술이 두려운 환자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허리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벼운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매일 20~30분 정도 평지나 낮은 언덕을 걷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특히 권장된다.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몸에 가깝게 붙여서 들어야 한다. 무리해서 허리를 억지로 비틀거나 구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앉을 때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엉덩이를 등받이에 대야 한다.

잠잘 때는 단단한 바닥을 고르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돌아누워서 자는 게 허리 건강에 좋다. 흡연은 요통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허리가 아프면 반드시 금연하고 뚱뚱한 사람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이○○ 기자 rontiger@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31218/59638957/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목·허리디스크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이라는 특정병원의 수술법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인기가수 휘성이 위 병원에서 디스크 시술을 받게 된 사연과 담당 의사의 진단과 시술 및 효과를 언급한데 이어 위 병원의 또 다른 시술법(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소개한 뒤 전문가의 입을 빌려 예방법을 안내하는 등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기사에서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언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위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특정병원의 시술법만을 과도하게 소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욱이 동아닷컴은 2013년 11월 27일자 「[첨단의학을 달린다] 목 허리 디스크질환 고주파로 10분에 끝낸다」, 2013년 8월 28일자 「[헬스&뷰티] 참기힘든 허리·목 통증 … 10분 고주파 시술로 한방에 잡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 이름만 다를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두차례 보도하였고, 2013년 5월 22일과 4월 24일에도 비슷한 형태로 위 병원을 집중 소개하는 내용을 연거푸 보도하였다.

특히 앞서 보도한 4건의 기사에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도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흰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 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했다”는 내용을 실어 마치 이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으로 특정병원을 여러차례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은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남초이스병원 소개기사 목록>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kpec.or.kr) 참조>

3. 사회적 책임

▲ 2013-1102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문>

영남일보 2013년 4월 9일자 3면 「TK출신 해수부 직원 씨말라 ... “현안 침몰 위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사무실. 지난 달 28일자로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한 김일수 서기관은 지난해 11월1일자로 친정인 경북도청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부)로 발령받았다. 김 서기관은 근무 만료일인 올 10월까지 과천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북도로 복귀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수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과 수산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되면서 정부 직제에서 사라진 지 5년 만이다. 해수부 부활로 부산·경남은 물론 수산·해양업계도 전반적으로 크게 반기고 있지만, 동해안을 낀 경북지역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해양수산비서관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과 비수도권의 ‘파워게임’에서 알 수 있듯이 TK는 인맥과 노하우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남일보에는 3회에 걸쳐 해수부 부활의 의미와 경북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을 집중 점검해 본다.

◆해수부 부활 약일까 독일까

부산·경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청와대도 인수위원회의 정부 직제 개편안에 해수부를 최종 포함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지 명맥을 이어온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정치권의 표계산에 따라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PK지역 해양수산업계와 정치권, 부산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수부는 세종시에 등지를 들었다.

경북도에서 파견 간 김 서기관은 해수부로 발령받았다. 그의 임무는 경북 동해안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사업에서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계가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김 서기관은 “해수부 내에서도 TK출신은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다. 동해안의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이라며 “경북도 수산·해양직 공무

원과 TK출신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토론했다.

◆해수부는 경북에 위기이자 기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해수부 부활에 직면해 경북 동해안 권역 수산·해양 분야에 대한 국비 확보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 부처의 부활로 전국의 각 시·도 단위 지자체의 수산·해양 분야 국비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경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도 고민을 더하고 있다.

3실·3국·9관·41과로 구성된 해수부 직원의 80% 이상이 부산·경남·호남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해양정책·수산정책·기획조정실, 해운물류·해사안전·항만국 등 주요 실·국 과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에 TK출신은 거의 전무하다. 윤진숙 장관 후보자와 손재학 차관은 부산 출신이다.

그동안 대구·경북 지역 고교와 대학에서 수산·해양 분야 인력 양성 노력을 등한시 해온 것도 이같은 인력 불균형의 배경이 된다.

부산의 경우 국립 해양대와 부경대 등 수산·해양 분야 전문 인력을 관련 공직과 업계에 해마다 수천여 명씩 진출시키고 있다. 전남도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수산해양대학과 여수수산대학을 통해 어업인력을 꾸준히 키워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구·경북으로 눈을 돌려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역 수산·해양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1954년 포항수산초급대학으로 문을 연 포항1대학이 수산 관련 전공을 운영하다가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경북지역 수산·해양 과제 산적

당장 경북도는 올해부터 동해안 일대 영일만항과 영덕 강구항 개발, 울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을 비롯해 수산 분야 유통과 양식, 신규 사업 등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중앙정부 내 인재풀의 한계속에 수산·해양 전공 인력 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목표를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내부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2011년 기준 전국 각 시·도 수산 분야 현황만 놓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예산만 보더라도 경남은 국·도비 규모로는 806억원으로 전국 1위다. 부산이 731억원으로 2위, 충남은 574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고, 경북은 567억원으로 부산·경남과는 20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수산해양 인프라 및 산업 규모를 보면 부산·경남으로 국비 지원이 쏠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경북 동해안의 경우 포항항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무역항조차 그동안 정부에서 키워주지 않았다.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해수부 출범을 호기로 삼아 경북 동해안에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모든 직원이 해수부를 찾아가 올해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며 “지역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산·해양·어업 인력을 키워 중앙에 인재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장기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경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획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다. 기사는 ‘〈상〉경북 동해안 먹구름’이라는 시리즈 소제목 아래 『해수부 부활로 수산 해양업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반기고 있지만 동해안을 낀 경북지역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TK인맥이 없어 국비확보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기사는 TK인맥과 관련해 『3실 3국 9관 41과로 구성된 해수부 직원의 80% 이상이 부산 경남 호남권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행된 해수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직원만 3,790명이다. 기사

대로라면 부산 경남 호남 출신은 본부에서 3천명을 넘어서는 셈이 된다. 그러나 기사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또 『주요 실국 과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에 TK출신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해양 수산분야 예산과 관련해 기사는 경북지역과 다른 지자체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경북의 예산규모는 경남(806억), 부산(731억), 충남(574억)에 이어 4위에 해당되는 567억원이다. 지자체별 산업구조, 주력산업, 특화산업 등을 감안한다면 경북의 해양 수산분야 예산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 혹은 ‘차별’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편집자는 큰 제목을 「TK출신 해수부 직원 씨말라…“현안 침몰위기”」로 달았다. ‘씨가 마르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기사에 『“해수부 내에서도 TK출신은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다…”』라거나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도…』라는 기술이 있기는 하나 이같은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목처럼 ‘씨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TK지역 주민의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근거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위협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안 침몰위기”」라는 표현은 본문 중의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이라는 내용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자극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다.

지역 신문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관심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면을 제작하는 것은 지역 우선주의 내지 지역 중심주의적 편견에 근거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문〉

국민일보 2013년 7월 31일자 1면 「또 高大서 ... /남학생 1명이 여학생 19명 성폭행·추행/의대생 사건」 이어 충격」 기사와 제목, 8면 「'高大 의대생 사태' 와중에도 버젓이 뽀글 짓 '경악'/2001년부터 올 초까지 여학생 3명 성폭행·16명 몰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 『고려대 남학생이 2년에 걸쳐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오다 적발됐다.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고려대에서 다시 엽기적인 학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려대학교' 명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이 학교 11학번 A씨는 2011년 초부터 올 초까지 2년간 같은 과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A씨의 성범죄를 파악해 최근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학교와 경찰이 확보한 A씨의 동영상 CD에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는 장면 외에 다른 여학생 16명의 치마 속이나 가슴 부위를 찍은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들어 있었다.

A씨는 동기생보다 서너 살 많아 같은 학번 여학생 사이에서 '좋은 오빠'로 불렸다고 한다. 범행 때마다 피해 여학생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한 뒤 술자리가 끝나면 모텔이나 교내 동아리방 등으로 데려가 '뽀글 짓'을 했다. 피해 여학생들을 조사한 경찰과 학교 측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그는 범행 장면을 전부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 동영상을 저장해 둔 CD가 유출되면서 A씨의 범행 사실도 들통 났다. 이 영상에는 수업 시간이나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같은 과 여학생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교 측과 별도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이미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학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19170&cp=nv>)

〈8면〉= 『2011년 5월 고려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도 같은 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학교 측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의 성범죄는 신입생이던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어졌다.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했고, 16명에게 ‘몰카(몰래카메라)’를 들이댔다.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가 난리통에 빠졌을 때도 그의 범죄 행각은 계속됐다. A씨를 잘 아는 한 고려대생은 “A씨는 입학이 늦어 동기들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았기 때문에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 ‘편하고 좋은 오빠’였다”고 말했다.

A씨는 술자리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했고 이 장면을 매번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덜미에 잡힌 것도 동영상 때문이다. A씨 사건을 접수한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불러 조사했다. 학교 관계자는 30일 “사안이 불거질 경우 피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지만 그렇다고 묵과하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해 학교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학교를 휴학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경찰은 A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

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캠퍼스의 성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서울의 한 유명 미술대학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5월 22일에는 규율이 엄격한 육군사관학교에서까지 남생도가 술에 취한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대학 280곳의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각 대학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09년 학교당 평균 0.6건에서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학 내 성범죄는 피해사실 입증에 쉽지 않고 소문이 날까봐 쉽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9명이나 됐지만 조사 과정에서야 피해 사실이 일부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내 성폭력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하는 대학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활동가는 “요즘은 각 대학이 성폭력상담센터나 양성평등센터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돕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성범죄는 훨씬 많다”며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19207&cp=nv>>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들은 고려대 남학생 A씨가 2년여에 걸쳐 같은 과와 다른 과 여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A씨는 신입생이던 2011년부터 2년 동안 같은 과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는 장면과 더불어 다른 여학생 16명의 치마 속이나 가슴 부위 등을 ‘몰카(몰래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을 CD에 담아 보관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범행 때마다 피해 여학생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한 뒤 술자리가 끝나면 모텔이나 교내 동아리방 등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해당 대학을 고려대로 특정한데다 기사에 나와 있는대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같은 과 여학생이며, 대학측의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대 안에서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는 금세 입소문을 탈 수밖에 없다.

성폭력 범죄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멍에처럼 짊어지게 되고, 자칫 신원이 노출되면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혐의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시점인데도 피해자 가운데 3명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단정해 보도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일보는 피해자들의 신분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기사를 처리했어야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성추행 사실은 밝혀졌지만 성폭행은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씨는 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됐다.

위 기사와 제목은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문〉

전북도민일보 2013년 8월 20일자 1면 「전북, 민주당 병참기지인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당 국회 계수조정소위 임명에서 전북이 철저히 차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소위 임명이 이뤄져, 민주당의 균형발전 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지역별 소위 임명 자료를 들어 “전북이 민주당의 총알받이와 병참기지 역할에 불과했다”라고 자조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소위 임명은 5년 동안 총 20명이었다.

이 중 전북은 지난해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 단 한 명에 불과, 전남·광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광주·전남지역은 소위 위원 수가 총 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가 예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지도부도 광주·전남 정치권이 장악했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 지역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열매는 광주·전남이 모두 차지 한 것이다. 도내 중진의원은 “꿀맛은 보지 못하고 침만 쏘였다”라는 비유로 당내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위치를 자조 섞인 말로 대신했다.

민주당은 소위 임명과정에서 권역별, 상임위별로 임명한다는 대원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 정치권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위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광주·전남 의원이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나 포함됐다.

민주당 몫으로 5명이 배정됐던 지난 2010년의 경우 전남 출신 서갑원 전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은 상황에 광주가 지역구인 장병완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불과 4명만 민주당 몫으로 배정됐던 2011년에는 광주의 강기정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전남의 주승용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소위 임명 결과만 놓고 보면 “호남이 다 해먹느냐. 호남 정당 색깔을 빼야 한다”라는 타지역 의원들의 불멘소리가 틀리지 않지만,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찬밥이었다는 정치권의 증론이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 차별받는 전북 정치권이 호남권에 간헐 필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5년 만에 전북 의원이 포함된 지난 2012년 소위 임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전북에 대한 배려가 아닌 정치적 우연에 따른 산물에 불과했다. 지난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 1~2명을 배려했던 과거 관행과 달리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4명, 5명에 머물렀던 민주당 몫도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전북출신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소위 임명에서 차별받고 있지만 올해 국회 계수조정 소위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지난해 전북의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도내의원 소위 임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 정치권과 김완주 지사 등은 이 때문에 20일 전병헌 원내대표 당 지도부에 전북 출신 계수조정 소위 임명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67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2012년까지 5년 동안 민주당소속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모두 20명(18대 국회 13명, 19대 국회인 2012년 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 『전북이 철저히 차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20분의 1’은 민주당 소

속 전체 의원수 등을 감안하면 적은 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북 지역이 민주당내에서 ‘철저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또, 기사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 취재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 자조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다.』 『도내 중진 의원은 … 자조 섞인 말로 대신했다.』 『… 타지역 의원들의 불멘소리 …』 『…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안에서 …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등의 기술을 하고 있다.

하나같이 발언한 사람들의 실체가 모호하고, 그나마 하나 있는 ‘도내 중진 의원’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조차 전북도의원인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인지 알 길이 없어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기술들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사는 광주 전남과 직접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전북 차별’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열매는 광주·전남이 모두 차지』 『“꿀맛은 보지 못하고 침만 쏘였다”』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찬밥』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 차별받는 전북 정치권이 호남권에 간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편집자는 작은 제목을 컬러 글씨체로 「예결위 계수소위 철저 배제」로 돋보이게 단 뒤 큰 제목을 「전북, 민주당 병참기지인가」로 달았다. 이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위 기사의 요약적 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독자를 자극하려는 의도의 선동적인 의견성 제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전북도민일보의 이같은 지면 제작은 결과적으로 대다수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 또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

명 조건), ③(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2.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3면 「충청의 습격/선거구 재획정 ‘호남 겨냥」」 기사의 제목, 全北日報 11월 18일자 1면 「국회 의석 빼가려는 충청/협력 창구 서터 내린 호남」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도민일보)= 『충청 정치권의 신 패권주의 전략에 전북 정치권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도당위원장 등 도내 의원들은 최근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재조정 주장을 ‘심각한 정치적 도전’으로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중앙 권력 재편을 위해 호남 정치권을 희생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6개월여 남은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19대 국회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은 빨라야 총선 1년 전에 진행돼왔다”라며 “충청 정치권의 선거구 재조정 주장에 대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야 의원,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내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직전 해 12월 말 국회의원 선거구가 결정된다. 2012년 4월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구 획정은 2011년 12월 말 이뤄졌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진행됐다.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영남 의석이 1석 늘면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지역 의석도 1석 늘리고 충청, 강원지역도 고려해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까지 299석이었던 국회의원 수가 19대 국회에서 1석 늘어난 300석이 된 것도 여·야간 정치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장을 영·호남중심의 정치구도를 영남, 충청 대결로 몰고 갈려는 의도로 정치권이 판단하는 이유다.

충청 정치권은 실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기점으로 충청 대망론이 불거졌다. 충청 대망론은 영·호남 중심의 권력구도를 충청 정치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충청지역 인구 증가 충청 대망론은 적어도 충청 지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에게는 충청 지역 국회의원의 의석수 재조정이 정치적 도약의 절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은 실제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전북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 수 축소를 내용을 담고 있어 호남 주도의 민주당 내 세력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충청지역 의석수 확보로 당내 세력을 영남, 충청 대결 구도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호남지역이 정치적 불모지인 만큼 전북 등 호남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충청 정치권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구·경북 의석수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호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것이 단적인 예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 충청이 526만 명이고 호남이 525만 명, 대구·경북은 520만 명이다. 의석수에 있어서는 호남이 30석, 대구·경북이 27석, 충청 25석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대구·경북이 충청보다 2석 더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604>)

(奎北日報)= 『충청권이 사실상 호남권 국회의원 의석을 겨냥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권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창구는 작동조차 안 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인구가 적은 호남이 충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올 들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했지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적은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호남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돼 호남권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전남 등 이른바 호남권은 기존의 협력창구가 전혀 가동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분열양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현재 호남권 갈등 해결과 공동 번영을 위해 호남권 자치단체·지방의회·경제단체가 각각 참여한 호남권정책협의회 및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호남권정책협의회와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도지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참석하는 호남권정책협의회는 5

년 전인 지난 2008년 11월5일 ‘제5회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아예 문을 닫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호남권은 최근 광주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상품거래소, 전주권 R&D(연구·개발) 특구 등 지역 현안사업을 놓고 대립, 감정싸움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광주공항 군산공항 이전’ 논란의 경우 호남권 자치단체가 공동번영을 논의하기는 커녕 심각한 분열 상태라는 것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광주시·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갈수록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작 호남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다.

전북도 관계자는 “호남권의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호남권의 공동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호남권 자치단체 중심으로 협력창구를 재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66>)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충청 정치권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요구를 전북 정치권이 ‘심각한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올 10월말을 기준으로 충청의 인구수는 526만 명이고 호남은 525만 명이다.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호남이 30석 충청은 25석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충청 정치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와 관련, 『충청 정치권의 신 패권주의 전략』 『호남 정치권을 희생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 『영·호남중심의 정치구도를 영남, 충청 대결로 몰고 갈려는 의도』 『영·호남 중심의 권력구도를 충청 정치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충청 대망론』 『새누리당은 정치적 경쟁자(호남지

역)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부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편집자는 큰 제목으로 「'충청의 습격」으로 달았다. '습격'은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근거없이 피해의식을 불러일으켜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奎北日報의 위 기사는 호남권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창구인 호남권정책협의회와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충청 정치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 요구 등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에 대해 두 줄 큰 제목으로 「국회 의석 빼가려는 충청/협력창구 셔터 내린 호남」이라고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충청 정치권이 호남지역 국회의석을 빼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선 이러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기사 본문에 『(충청 정치권의 주장은)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호남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돼 호남권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 311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문〉

每日新聞 2013년 11월 19일자 1면 「새누리당서도 토사구팽/권력구도에서 밀려나는 대구경북 <1>」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일등공신이지만 결불도 쪼지 못하는 형국이다. ‘박근혜의 사람들’ 이름에는 부산경남(PK)만 오르내리고, 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려 의뭉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역 편중 예산’이란 야권의 공세에 모조리 깎일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낙동강 오리 알 신세다.

◆여권은 대구경북을 외면

“100만 표 차로 이겼다. 대구경북에서 200만 표 차이가 났으니 우리 지역이 당선의 일등공신 아니냐”는 한 여권 관계자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오로지 집토끼’ 역할만 했으니 누가 알아주지도, 요구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새누리당 권력지형에서 대구경북은 소수파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자리에 대구경북 정치인은 없다. 최경환 원내대표(경산청도)는 민주당과의 정쟁(政爭)에 발이 묶여 있다. 지역을 돌아보며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정부의 최근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후보 지명에도 지역 출신 인사는 리스트에 없었다. 아니 그 몇 배 수 속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 이명박정부가 ‘TK 소외와 역차별’로 반여 정서를 높렸던 것을 고스란히 학습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친박계 핵심으로 통하는 한 의원은 “박 대통령으로선 대구경북에 빚진 마음이 없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4선)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을 봐야 하는 대통령 신분”이라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정부에서 TK가 워낙 누렸다는 비판이 크다. 뭔가를 하겠다, 뭔가를 해줘야겠다고 하면 다 ‘욕심’으로 보니 챙겨줄 수 있겠는가”하며 자아비판을 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당·대권 주자로 부상한 부산의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역사교실이라는 당내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10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이 가입했다. 이어 ‘퓨처라이프 모임’을 만들어 노후 대비 등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이 눈치를 보며 가입하는 모양새다. 18일에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창립총회를 열었다. 부산의 유기준 최고위원과 충청의 이완구 의원이 주도한다. 대구경북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客)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충청 정치권은 의몽스러움을 여과 없이 보이고도 있다. 인구 수로는 호남권을 넘어섰는데 의원 수는 5석이나 적다며 국회의원 증원을 꾀한다. 당내에선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가 없다. 의석 수를 늘리는데 충청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에는 아예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구경북 정치권, 자생력은 있나?

정치권은 ‘포스트 박근혜’의 부재가 대구경북 정치권으로선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이라 진단한다. 과거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이상득 박종근 이해봉 전 의원 등이 은퇴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선수(選數)로 치면 졸(卒) 부대와 다름없다. 대구 12명 의원 중 초선이 절반 이상인 7명, 재선이 단 한 명, 3선이 3명, 4선이 1명이다. 부산은 초선이 4명, 재선이 6명이나 되고, 3선 이상은 5명이다. 3선 이상의 선수를 모두 모으면 20선으로 대구(13선)보다 큰 어른이다.

문제는 용기와 결집력이다. 지역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나서서 문제 해결 방안을 주도하는 의원을 찾기 힘들며 당내 정치세력화는 더욱 어려운 상태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신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10여 년 동안 원점을 헤매고 있지만 세종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여줬던 충청권이나 지역 예산을 위해서는 뽕뽕 뭉치는 호남권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초선 의원은 “끌어주는 선배도 없다”고 푸념하기 일쑤고, 재선 이상 중진들은 “초선이 너무 얌전하다. 뭘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한다. 그런데 서로 탓만 할 뿐 모여 머리를 맞대진 않고 있다. 당권이든, 대권이든

리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권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참담한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7230&yy=201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은 ‘권력구도서 밀려나는 대구경북’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위 기사는 그 첫 번째 기사로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의 현주소를 진단한 분석기사다.

기사의 핵심은 중앙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정권 재창출의 일등공신이지만 오히려 권력구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그러면서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무기력증을 앓고 있어』 『결불도 쪼지 못하는 형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 『“토사구팽(兔死狗烹)이다.”』 『집토끼 역할』 『권력지형에서 소수파』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客) 신세』 『선수(選數)로 치면 졸(卒) 부대』 『여권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다른 시도 정치권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 나열도 없이 『박근혜의 사람들』 이름에는 부산경남(PK)만 오르내리고』 『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려 의뭉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이 권력 재창출의 일등공신으로 권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타 지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경계심을 드러내는 기술로,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또, 편집자는 이 연재물 제목을 「권력구도에서 밀려나는 대구경북」으로, 기사의 큰 제목을 「새누리당서도 토사구팽」으로 달았다. 기사 본문을 보면 ‘토사구팽’은 익명의 ‘한 여권 관계자’가 말한 것으로 기술한 내용이 있긴 하나 객관

적인 근거도 없는데도 편집자는 이를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제목에 담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과장되고,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보도와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2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4년 3월 12일자 A31면 「위조여권, 80만원 주면 일주일새 ‘뚝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빠른 위조 여권, 완료 7일, 신분증 위조 070-****-******』

‘위조 여권 copy*****@hotmail.com, 전화번호로 광고하는 곳에 문의하면 경찰에 걸립니다. 위험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위조 여권 호객 문구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에도 위조 여권이 쓰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온라인상에 각 나라 여권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판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 등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전문 브로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브로

커에게 인적 사항과 원하는 나라의 여권 등을 보내면 경찰 추적을 피해 맞춤형으로 가짜 여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브로커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등 대부분 국가의 여권을 취급한다. 위조 여권은 보통 EMS(국제배송)를 이용해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며 기한은 5~7일 정도 소요된다. 가격은 80만~100만원 안팎이다.

일부는 브로커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문 위조 인터넷 사이트까지 열어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 샘플 이미지까지 올려 놓고 자신들의 정교한 위조 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자주 묻는 질문(F&Q) 코너까지 운영하며 위조 여권에 자신들의 최신형 특수 잉크와 워터마크 등을 박아 넣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다고 광고한다.

전문 위조 사이트인 buypassports****.**에서 는 주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불하면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무료 배송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여권을 위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브라질 여권의 경우 400유로(약 60만원), 캐나다·독일·프랑스 등의 여권은 600유로(약 88만원), 가장 비싼 미국 여권은 700유로(103만원) 등이다.

또 위조 여권을 위조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저렴한 묶음상품으로도 제공하고 있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예를 들어 900유로(약 132만원)만 있으면 미국 국적의 여권과 운전면허증(Driving Licence), 그리고 신분증(ID Card)까지 풀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심지어 신용카드뿐 아니라 최근 각광받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위·변조 여권은 모두 1만9213건에 달했다. 2009년 2523건에서 2012년 570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417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에 3~4건 정도 위·변조 여권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취업을 위해 해외에서 위·변조 여권을 구해 입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사례는 20만건을 넘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전자여권 이전에 만들어진 여권이라 위조 위험에 노출돼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8407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위조 여권으로 탑승한 승객이 있다는 점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위조 여권 판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전문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는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인적 사항 등을 보내면 경찰 추적을 피해 맞춤형으로 가짜 여권을 전달받을 수 있고, 기한은 5~7일이며 가격은 80만~100만원 안팎이라는 등 세세한 내용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또 나라별 위조 여권의 가격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위조 여권과 위조 운전면허증까지 ‘풀 옵션’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전문 위조 사이트’라며 ‘bypassports****.***’라는 인터넷 주소를 일부는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채 소개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검색엔진을 사용하면 손쉽게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여권 위조 사이트를 안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조 여권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단지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일 뿐 실제로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위조 여권 제작이나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했다.

이 기사는 위조 여권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조 여권 구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제공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3월 4일자 8면 「강남엄마의 ‘공부 알약’ … 정체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모(여)씨는 고교 3학년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두 달 전부터 집중력 향상을 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트’를 매일 두 알씩 복용했다. ADHD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콘서트를 복용했다는 최씨는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으면 3~4시간이 단숨에 흘러갔고 암기력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았다”면서 “강남 일부 병원에서는 공부 때문에 약을 먹고 싶다고 하면 처방전을 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 주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채 오남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가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처방된 건수는 2010년 58만 3867건에서 2011년 60만 5510건, 2012년 65만 645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50만 5930건으로 주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대 교수는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 정보가 심평원에 기록되는데, 자녀의 처방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물을 병원에 처방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ADHD 치료제를 구입하려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와 게시판 등에는 “페니드 하루분 2000원에 삽니다”, “페니드, 콘서타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2주마다 병원에 가는 게 번거롭다. 택배 배송이나 직거래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입소문이 확산된 탓에 소량의 약을 개인적으로 거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새 학기를 맞아 감시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메칠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연화 경희대 약대 교수는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장복하면 식욕 감퇴, 구토, 성장 장애, 환각, 환청 등 마약류를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ADHD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한 뒤 학업 성취도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치료를 통해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완화돼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메칠페니데이트는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0400801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학부모들 사이에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소문나 자녀 공부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다.

위 기사를 다룬 취지는 항정신성의약품인 ADHD 치료제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처방 증가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일 것이다. 기사 본문에서도 『새 학기를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 주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채 오남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콘서타’ ‘메칠페니데이트’ 등의 ADHD 치료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물론, 『처방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물을 병원에 처방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과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ADHD 치료제를 구입하려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불법·편법적인 구입 경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페니드 하루분 2000원에 삽니다』 『2주마다 병원에 가는 게 번거롭다. 택배 배송이나 직거래했으면 좋겠다』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 글까지 인용하며 마치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되는 것인 양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게재했다.

기사는 또 『약을 먹으면 3~4시간이 단숨에 흘러갔고 암기력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다』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 주는 ‘공부 잘하는 약’』 등의 표현으로 독자들이 ADHD 치료제의 약효를 오인해 오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게 했다.

기사는 또 제목에 「강남엄마의 ‘공부 알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강남엄마’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ADHD 치료제 복용 경험이 있다는 최모 씨의 사례 1건과 『강남 일부 병원에서는 공부 때문에 약을 먹고 싶다고 하면 처방전을 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최씨의 전문 외엔 기사 본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위와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공부 알약’ 사용이 강남 엄마들 사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추측과 예단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보도행태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4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27일자 10면 「한국해커들, 日 '2ch'〈극우 사이트〉 공격 예고/4년만에 3·1절 사이버 한일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일 양국 간 감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3·1절을 앞두고 한·일 간 '사이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1년 이후 매년 3·1절이면 크고 작은 싸움을 해온 디시인사이드(디씨·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반일 온라인 카페와 2ch(2채널·일본 내 극우성향 커뮤니티)는 2010년 3·1절 사이버 공격 이후 서로 대규모의 공격을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내 한 해커가 4년 만에 대규모의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을 유포했다.

과거 2ch와 사이버전을 벌였던 디씨 역사갤러리에는 지난달 22일 '2010년의 영광을 다시 한 번, 3·1절 2ch 테러 공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올해는 더 많은 해커들이 참여해 2ch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2010년 사이버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아이디 '네거티 자페'로 활동)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 디씨 코미디프로그램 갤러리(코갤)의 산하 '코갤정보원'의 리더(총통)로, 이 글은 지난달 8일 A 씨의 블로그에 게시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코겔 총통 네거티다. 한국인 유학생 사망을 조롱하던 일본 원숭이들에 분노해 우리는 일본 네티우익의 근거지인 2ch를 박살내고 단죄한 영광스러운 업적이 있다. 나 또한 당시 공격을 지휘하며 참전한 기억이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이어 “4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 일본 원숭이들은 다시 도발을 일삼고 있다. 현재 일본은 급격히 우경화되고 그 수장 아베 신조는 신사 참배를 하는 등 막장짓을 일삼고 있다.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지껄이고 최근 미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 네티즌의 청원이 10만건을 넘어서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새끼들은 매가 약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겠다. 이번 공격을 위해 새로운 공격 도구 등을 이미 제작 중이다. 2014년 3·1절, 일본 원숭이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더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일본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온라인 카페 ‘네티테러대응연합(네티대연)’에도 3·1절 사이버전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이달 8일 ‘2ch 터는 날 없느냐’라는 제목의 글에 ‘3·1절에 털지 않을까 싶다’는 답글이 게시됐다.

‘일본 안티 카페(일안카)’에도 이달 22일 ‘2ch 테러 안하냐’는 글이 올라왔고, ‘고려해볼게’라는 댓글이 달렸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일본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기념행사를 강행하는 등 반일 감정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보이더라도 실제 사이버전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3·1절을 앞두고 한·일 해커 간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집중 감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과 2012년, 지난해 경우에는 3·1절을 앞두고 디씨 코겔, 네티대연, 일안카 등에서 2ch에 대한 공격이 예고됐지만 실제 2ch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매년 3·1절에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나 악성 게시물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청와대, 외교부 및 독도 관련 사이

트,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 주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700011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3·1절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해커들 간 사이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위 기사를 사회면 머릿기사로 게재했다. 기사는 이의 근거로 『최근 국내 한 해커가 4년 만에 대규모의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을 유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글을 올린 사람은 2010년 사이버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다. 또한 이 글이 게재된 곳은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디씨)다. 디씨에 올라온 글의 제목은 『2010년의 영광을 다시 한 번, 3·1절 2ch 테러 공격』이며, 내용은 올해는 더 많은 해커들이 참여해 일본의 극우성향 커뮤니티인 2ch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이 게재된 것은 기사가 보도되기 한 달여 전인 1월 22일이라고 한다. 이후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양국 해커들 간의 사이버 전쟁 가능성이나 관련된 움직임은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 기사 내용도 A씨가 올렸다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일본 사이트에 공격을 시도했던 온라인 카페와 일본 안티 카페에 올라온 ‘2ch 테러’ 관련 질문에 대한 답글도 인용하고 있으나 『3·1절에 털지 않을까 싶다』 『고려해볼게』 등의 막연한 내용이어서 사이버 전쟁을 벌이겠다는 구체적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기사 게재 이틀 뒤인 3월 1일이나 그 이후에도 사이버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기사는 또 A씨가 올렸다는 인용한 글에서 일본인들을 『일본 원숭이』로 비하하고, 『이 새끼들은 매가 약이다』 『수장 아베 신조는 신사 참배를 하는 등 막장 짓을 일삼고 있다』 등 두 나라 국민감정을 자극할만한 표현을 여과 없이 게재했다.

이처럼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뚜렷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하고 지속적인 표현

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일부 독자들의 반일감정에 기대고 이를 자극하는 선 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며,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 2014-1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문〉

전북도민일보 2014년 1월 17일자 1면 「‘호남 3선 제한론’ 망언에 전북 정치권 발끈/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 발언 일파만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이 원한다면 호남 3선 제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민주당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노 사무총장은 16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 혁신 차원에서 거론된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호남지역 국회의원 3선 제한론’에 대해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면 어떤 것을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사무총장은 ‘국민이 원한다면’이란 토를 달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전북 정치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북 의원을 비롯 호남 정치권 인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권을 볼 모로 한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역민들도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호남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했느냐”라며 “노 총장이 지역구로 있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의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전북 등 호남지역만 유일하게 안철수 신당과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현실에 대한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전남과 도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전북과 광주는 민주당과 안 신당이 오차범위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은 민주당이 안 신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한 국회의원은 “노 총장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전북 정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층세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지선 승리를 위해 현재 지역에서 밤낮으로 발품을 파는 현역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등에서 총을 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중 7명이 초선의원으로 채워졌으며 이중 정읍과 남원, 순창지역은 무소속과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됐다.

현역 교체 비율이 70%를 넘어서 전국 평균 50%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현역의원 교체는 ‘쓰나미’로 비유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7대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지역을 떠났으며 18대 대선에 출마한 정세균 의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 도 정치권 위상 추락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노 사무총장은 이날 호남의 ‘중진차출론’과 관련해 “국민이 원한다면 모든 문제를 국민 편과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며 “최적, 최강의 후보를 상향식 공천과 투명한 공천 시스템에 의해 하려고 한다. 국민이 원하신다고 하면 누구도 우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

해서도 “중진차출론과 상향식, 투명공천 시스템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이름을 그만 팔고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권을 비하하는 낡은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9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호남 3선 제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전북 등 호남 지역의 비판적인 의견을 묶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16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 혁신 차원에서 거론된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호남지역 국회의원 3선 제한론’에 대해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면 어떤 것을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전북 의원을 비롯 호남 정치권 인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권을 볼모로 한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망언’이라는 표현 자체를 중립적이지 못한 『극단적 발언』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 큰 제목을 「‘호남 3선 제한론’ 망언에 전북 정치권 발끈」이라고 달았다. 실체가 불분명한 『호남 정치권 인사들』이 사용한 ‘망언’이라는 『극단적 발언』을 객관화된 표현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 문〉

국제신문 2014년 2월 14일자 1면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황우여의 억지/새누리 최고위서 여론몰이/“극지연구와 해양 분리해야”/부산이전 해과원서 독립 주장/부산의원들은 눈치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개소 직후, 인천 정치권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영구 잔류시키고 극지연구를 해양과 분리하려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극지와 해양을 분리하면 연구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양과기원은 내년 12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지연구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지속하도록 해양연구의 한 부분으로 치부됐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연구소를 독립시키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극지연구소는 미래 창조과학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극지연구소 독립 및 인천 잔류는 해양과기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현재 황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있다. 황 대표는 2012년 대선 기간 연구소의 인천 잔류 등을 담은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재균 전 의원, 서병수 김세연 하태경 의원 등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극지연구는 해양·생명·대기·빙설·지질·운석·북극정책 등 7개 세부

연구로 나뉘고 4, 5개 분야가 해양연구로 분류된다. 예컨대 바다에서 크릴새우 등을 먹으며 서식하는 펭귄의 연구는 해양연구이면서 동시에 생명연구·극지연구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중국 미국 같은 선진국도 해양과 극지의 융합연구를 한다며 황 대표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독일 알프레드베게너 연구소는 극지·해양연구소이고, 극지 선진국인 중국은 극지연구를 국가해양국 산하에 두고 있다.

한국해양대 남창도 기관공학부 교수는 “해양과 극지는 연계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분리하면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황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 출신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 발언을 반박하지 않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0214.2200121245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은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독립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극지활동 진흥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영구 잔류시키고 극지 연구를 해양과 분리하려는 정치적 여론몰이』라는 요지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극지 연구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지속하도록 해양 연구의 한 부분으로 치부됐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아래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문제의 ‘극지활동 진흥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에는 몇몇 부산 출신 의원들도 서명했다.

그런데 과거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는 2007년부터 부산 이전 문제를 놓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9년 9월 교육부와 국토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결정에 따라 인천 잔류가 확정됐고, 2010년부터 새 청

사 건설 작업에 들어가 지난 해 4월 준공식을 가졌다. 그리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개 연구동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극지연구소의 독립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사의 소재지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제신문은 황 대표가 극지연구소의 소재지 문제에 얽매어 무리하게 ‘뒤집기’라도 시도하는 양 ‘억지’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황우여의 억지」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 ‘억지’라는 표현은 없다.

이 같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지역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8 신문윤리강령 위반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주문〉

강원도민일보 2014년 2월 25일자 2면 「원경환<평창> 경무관 인천아시안게임 기획단장 발령/“강원출신 경찰 홀대” 뒷말 무성/靑 “특별한 배경 없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강원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평창출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경무관)이 24일 출범한 ‘경찰청 인천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101경비단은 청와대의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자리로 통상 2년 전후 근무하고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코스다.

원 경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1년2개월 정도 근무했으나 이날 경찰청 인천 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발령됐다.

원 경무관은 간부 37기로 정선서장, 본청 장비과장, 서울 강동서장, 본청 감찰담당관을 거쳐 2011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인천청 차장을 거쳤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경북 김천출신으로 김천고와 경찰대(제4기) 출신으로 지난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박건찬 인천경찰청 제2부장이 왔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발령 1개월만에 요직으로 손꼽히는 청와대 101경비단장으로 영전했다.

이번 인사를 놓고 도출신의 경찰청 인사들은 “힘없고 배경없는 강원출신 경찰 홀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 의원은 최근 현 정부들어 단행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자 13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출신고 등이 확인된 129명 중 영남 인사가 58명(45%)에 이르렀다고 ‘지역 편중인사’를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수요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서 특별한 인사배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6946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평창 출신 원경환 경무관이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에서 2월 24일 출범한 경찰청 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놓고 강원 출신이라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처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의 단장은 통상 2년 가량 재직하고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코스이지만, 원 경무관은 1년 2개월 가량만 근무하고 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옮겨 갔으며, 그 자리에는 경북 김천 출

신의 새내기 경무관이 발탁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와 관련해 『도출신 경찰청 인사들은 “힘없고 배경 없는 강원출신 경찰 홀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 「“강원출신 경찰 홀대” 뒷말 무성」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기사는 원 경무관이 강원 출신이기 때문에 ‘홀대’를 받았다는 데 대한 명백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가 적시한대로 101 경비단장이 치안감 승진을 보장받는 노른자위 자리라면, 원 경무관이 그 자리를 맡았던 것은 오히려 ‘우대’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경찰 치안활동의 총괄사령탑으로 출범한 아시안게임 기획단의 단장 자리가 101 경비단장에 비해 치안감 승진에 불리하다는 객관적인 평가도 없다.

기사는 말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수요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서 특별한 인사배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할 만한 근거를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추측과 확대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과장기사로, 특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